

전략연구 2013-01

#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 방안

고승희·홍성효 외



# 발 간 사

행복을 향한 의식변화와 함께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질적 행복에서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아실현 또는 여가와 문화 등 비경제적 가치관과 주관적 만족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국가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 간 행복수준을 비교하는 형태에서 개별 국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의 정책으로 활용하려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들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 2012년 선도적으로 지역의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측정 틀을 정립하였으며 올해에는 개발된 측정지표를 조사하고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정책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복에 대한 기초연구 수준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행복지표의 조사결과에 대한 추적과 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비롯하여 정책적 연계 및 활용방안 모색 등 향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타 시도연구원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원들과 학자,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향상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연구가 충남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충남도정의 행복정책에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흡한 연구환경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고승희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과 홍성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자문위원님과 충남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강 현 수



# 연구 요약

진정한 행복을 위한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관련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물질적 행복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자아 실현 혹은 구성원 간 관계의 유지나 여가와 문화의 향유와 같은 행복에 있어서의 비경제적 가치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2012년에 충남의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과제의 수행을 통해,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 틀을 정립하였다. 특히,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영역과 영역별 지표의 선정, 충남 행복지표 설정에 있어서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영역별 도민의 만족도 및 영역별 객관적 세부지표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2012년 과제를 통해 선행되었다. 따라서, 충남 도민의 행복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발굴을 위해서는 2012년 연구결과(충남 행복지표의 측정 틀)에 기초하여 충남 도민의 행복지수를 실제로 측정하고 이와 함께 행복지수와 정책연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충남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표들에 대한 수치의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일자리/소득/소비영역에서 충남의 고용률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의 수치에 비해 높으나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최근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으며 충남의 여성실업률 또한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한 세부지표에서 충남은 전국에 비해 여건이 나은 편이나 시계열적으로는 최근에 여건이 악화되어 도민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교통영역에서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국 수치와 유사하며,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범죄발생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공원면적의 경우 충남은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며 이러한 결과는 주거/교통부문에 있어 충남의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한다. 가족/공동체 영역에서 충남의 부자세대가구수는 2001년 대비 최근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국의 경우 동기간에 오히려 다소 증가한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 독거노인비율이나 소년소녀가장비율에서 충남은 대체로 전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주관적 만족도에서 가족/공동체영역은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영역에서 충남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전국 평

균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으나, 그 격차가 최근에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불만족하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영역의 세부지표들에 대해 충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즉, 열악한 여건 혹은 제한적 기회-로 나타난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해외여행의 경험 역시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레저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전국의 추세에 비해 충남은 최근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 도민이 타 지역 사람들에 비해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가 낮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문화/여가영역에 대한 도민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낮음을 고려할 때 이는 도내 문화/여가시설이나 공연의 부족과 같은 여건의 상대적 열악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역에서 비록 도민의 주관적 만족감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하천수질이나 호소수질에 대한 충남의 수치가 전국의 수치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공공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건강/보건의영역에서 충남의 출생시 기대수명은 전국 평균에 비해 대체로 낮으나 최근에는 전국의 수치를 근접하였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에서 충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나 2006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민의 건강/보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주민참여영역에서 투표율은 지방선거와 이외의 선거 간에 충남의 상대적 수치가 상이하다. 지방선거에서 충남의 투표율은 전국의 수치를 상회하지만, 지방선거 이외의 선거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도민의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국가 전체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높음을 나타낸다. 충남도의 정보공개율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중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개인의 특성 가운데 혼인상태와 종교의 유무에 따라 행복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미혼에 비해 기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은 반면 이혼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역별 행복감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무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일자리 자체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 건강/보건의 영역에서 주요 세부지표 가운데 하나는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질병의 유무를 설명변수로 모형에 포함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질병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영역에 대한 대표 세부지표로서 거주지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을 분석모형에 포함한 결과는 거주지 대기의 질이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동체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를 대표 세부지표로서 회귀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해당 개인의 행복감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문화/여가 영역을 대표하는 세부지표로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모형에 포함한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해당 응답자의 행복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학군 및 학원 등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교육 영역에서의 대표 세부지표로 행복감을 결정하는 분석모형에 포함되며 분석의 결과는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교통 영역에서는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 내 대중교통 서비스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대표적인 세부지표로 회귀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대중교통의 만족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충남을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우, 분석의 결과는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일부 차이를 볼 수 있다. 개인의 특성 가운데 연령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가 군 지역에서는 나타나는 반면, 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행복감은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행복감의 감소가 군 지역 거주자에 비해서 시 지역 거주자에게 보다 크게 나타나며,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군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표는 지역 주민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values)와 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실행(actions)간의 차이에 대한 대차대조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행복지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동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충남도도 중앙정부의 국민행복정책에 기반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시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우선, 도민의 행복지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영역 간 혹은 시계열적으로 도민 행복지수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민 행복지수의 측정을 통해 영역 간 혹은 세부지표들 간 여건의 변화를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역이나 세부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개발

에 도의 예산과 인력을 집중시킴으로써 행복지수의 정책연계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시책의 개발과정에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발된 시책이 도민으로부터의 지지를 얻고 도민의 행복증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나 기존 정책의 지속이 도민의 행복증진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시책의 개발이나 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도민의견수렴이 요구된다. 행복지표의 향후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해결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행복에 대한 연구가 정책적 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추가적인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행복 측정은 행복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행복의 관련 요인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며 특히 국제적 연구노력에 비해 국내의 측정노력이 취약하고 결과의 축적이 미흡한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측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지자체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수준, 그리고 국제적 비교 측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행복측정이 웰빙지표로서 GDP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위에서 측정을 통해 우리 삶의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행복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b>제1장 서론</b>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	2
1) 연구의 주요 내용 .....	2
2)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절차 .....	4
<b>제2장 행복도 측정을 위한 충남의 행복지표개발</b> .....	5
1.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개발 과정 및 절차 .....	5
1) 2012년 행복지표 개발의 추진절차 .....	5
2) 영역의 설정 .....	6
3) 영역별 세부지표의 선정 .....	10
2. 개발 결과 .....	11
<b>제3장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b> .....	14
1. 측정 방법 .....	14
2. 영역별 세부지표의 측정 .....	17
3. 충남 도민의 행복감 결정요인 .....	69
1) 분석 방법 .....	69
2) 분석 자료 및 표본의 분포 .....	70
3) 분석 결과 .....	70
<b>제4장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를 위한 과제</b> .....	75
1. 조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	75
1) 주거 및 교통 분야 .....	75
2) 일자리/소득/소비 분야 .....	77
3) 교육 분야 .....	79

4) 가족 및 공동체 분야 .....	81
5) 문화 및 여가 분야 .....	83
6) 환경 분야 .....	85
7) 건강 및 보건 부문 .....	87
8) 주민참여 부문 .....	89
2. 행복지표 조사와 정책연계를 위한 과제 .....	91
1) 정책적 연계를 위한 조건 .....	91
2) 정보공개를 통한 인식전환 기능의 강화 .....	92
3) 정책적 활용기반 마련 .....	96
4) 행복지표의 조사 및 운영방식의 개선 .....	99
3. 정책적 활용 사례 .....	102
1) 부탄 .....	102
2) 일본 .....	104
3) 태국 GHI(Green and Happiness Index) .....	107
4) 잭슨빌 사례 .....	113
<b>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b>	<b>116</b>
1. 정책제언 .....	116
2. 결론 .....	118
 참 고 문 헌 .....	 120
 설 문 지 .....	 124

# 표 목 차

<표 2-1>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	12
<표 3-1> 표본의 인구계학적 특성 .....	16
<표 3-2> 주거 및 교통 부문 만족도 .....	22
<표 3-3> 도내 시군별 고용률 .....	24
<표 3-4> 월평균 가구소득 .....	27
<표 3-5> 가구당 월평균 지출비(식료품/비주류 음료비 및 외식비) .....	29
<표 3-6> 가구당 월평균 지출비(보건/의료비) .....	30
<표 3-7> 가구당 월평균 지출비(통신비) .....	31
<표 3-8> 가구당 월평균 지출비(오락/문화비) .....	32
<표 3-9> 일자리/소득/소비 부문 만족도 .....	33
<표 3-10> 교육 부문 만족도 .....	35
<표 3-11> 가족 및 공동체 만족도 .....	41
<표 3-12> 문화 및 여가 부문 만족도 .....	46
<표 3-13> 환경 부문 만족도 .....	51
<표 3-14> 도내 시군별 인구천명당 병상수 .....	55
<표 3-15> 건강 부문 만족도 .....	55
<표 3-16> 2012년도 전국자치단체 청렴도 .....	60
<표 3-17> 2012년도 전국자치단체 정보공개율 .....	62
<표 3-18> 주민참여 부문 만족도 .....	62
<표 3-19> 주관적 웰빙 부문 만족도 .....	63
<표 3-20>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결과 .....	66
<표 3-21>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1
<표 3-22> 인구특성별 행복감에 대한 영향 .....	74
<표 3-23> 일자리/소득/소비부문 분석결과 요약 .....	77
<표 3-24> 일자리/소득/소비의 정책방향 .....	77
<표 4-1> 부탄 정책심사도구의 22개 선정지표 .....	103
<표 4-2> GHI 지수의 구성 .....	109
<표 4-3> GHI 산출 결과를 통한 정책권고 .....	113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	3
<그림 1-2> 연구의 추진절차 .....	4
<그림 2-1> 2012년 행복지표 개발체계 .....	5
<그림 3-1> 연도별 주택가격지수 .....	17
<그림 3-2> 지역별 주택가격지수 .....	18
<그림 3-3>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	18
<그림 3-4>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	19
<그림 3-5> 연도별 1인당 공원면적(m <sup>2</sup> ) .....	20
<그림 3-6> 지역별 1인당 공원면적(m <sup>2</sup> ) .....	20
<그림 3-7> 연도별 범죄발생건수(건) .....	21
<그림 3-8> 지역별 범죄발생건수(건) .....	21
<그림 3-9> 지역별 고용률(%) .....	23
<그림 3-10> 연도별 고용률(%) .....	23
<그림 3-11> 지역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25
<그림 3-12> 연도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25
<그림 3-13> 지역별 여성실업률(%) .....	26
<그림 3-14> 연도별 여성실업률(%) .....	26
<그림 3-15> 지역별 비정규직 비중(%) .....	28
<그림 3-16> 연도별 비정규직 비중(%) .....	28
<그림 3-17> 연도별 교원1인당 학생수(명) .....	34
<그림 3-18> 지역별 교원1인당 학생수(명) .....	34
<그림 3-19> 지역별 소년소녀가장 비율 .....	36
<그림 3-20> 연도별 소년소녀가장 비율 .....	36
<그림 3-21> 지역별 노인인구비율 .....	37
<그림 3-22> 연도별 노인인구비율 .....	37
<그림 3-23> 지역별 모자세대 비율 .....	38
<그림 3-24> 연도별 모자세대 비율 .....	38
<그림 3-25> 지역별 부자세대 비율 .....	39
<그림 3-26> 연도별 부자세대 비율 .....	39
<그림 3-27>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	40
<그림 3-28> 연도별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	40
<그림 3-29> 지역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	42

<그림 3-30> 연도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	42
<그림 3-31> 지역별 레저시설 이용여부 .....	43
<그림 3-32> 연도별 레저시설 이용여부 .....	43
<그림 3-33> 지역별 해외여행 여부 .....	44
<그림 3-34> 연도별 해외여행 여부 .....	44
<그림 3-35> 지역별 국내관광여행 여부 .....	45
<그림 3-36> 연도별 국내관광여행 여부 .....	45
<그림 3-37> 하천수질(BOD) .....	47
<그림 3-38> 호소수질(COD) .....	48
<그림 3-39> 호소수질(T-P) .....	49
<그림 3-40>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율 .....	50
<그림 3-41> 지역별 출생시 기대수명(세) .....	52
<그림 3-42> 연도별 출생시 기대수명(세) .....	52
<그림 3-43> 지역별 음주율 .....	53
<그림 3-44> 지역별 흡연율 .....	53
<그림 3-45> 인구천명당 병상수(개/천명) .....	54
<그림 3-46> 연도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	56
<그림 3-47> 지역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	56
<그림 3-48> 연도별 지방선거 투표율 .....	57
<그림 3-49> 지역별 지방선거 투표율 .....	57
<그림 3-50> 연도별 대통령선거 투표율 .....	58
<그림 3-51> 지역별 대통령선거 투표율 .....	58
<그림 4-1> Jacksonville의 「한 눈에 보는 삶의 질 보고서」 .....	94
<그림 4-2> 서울특별시의 희망서울 생활지표 홈페이지(예시) .....	95
<그림 4-3> 행복지표의 정책과의 연계 .....	97
<그림 4-4> GHI 평가점수에 따른 정책적 의미 .....	111
<그림 4-5> 제10차 개발계획 기간(2007~2011)의 GHI 산출 결과 .....	112
<그림 4-6> Jacksonville 지표체계의 지역사회 변화 모형 .....	115
<그림 5-1> 개인의 행복과 위계별 역할 .....	116
<그림 5-2>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충남도의 정책추진 .....	117
<그림 5-3> 충남도민 행복지표의 측정과 정책연계 .....	118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진정한 행복을 위한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관련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물질적 행복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자아 실현 혹은 구성원 간 관계의 유지나 여가와 문화의 향유와 같은 행복에 있어서의 비경제적 가치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2년에 충남의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과제의 수행을 통해,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틀을 정립하였다. 특히,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영역과 영역별 지표의 선정, 충남 행복지표 설정에 있어서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영역별 도민의 만족도 및 영역별 객관적 세부지표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2012년 과제를 통해 선행되었다.

하지만, 충남 도민의 행복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발걸을 위해서는 2012년 연구결과(충남 행복지표의 측정틀)에 기초하여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를 실제로 측정하고 이와 함께 충남 도민의 행복에 대한 조건을 밝히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복지표의 측정은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표도 포함해야 하고, 영역 간 그리고 세부지표 간 가중치를 결정해야 하며, 측정을 위한 지역 단위의 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영역별로 충남 도민의 행복에 대한 기대수준과 기본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행복지표 측정을 통해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의 영역별 우선순위 파악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서열화의 문제로 향후 추가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내각부 산하 웰빙측정위원회에서 일본 국민의 행복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제 행복감을 조사하여 이 둘 간의 괴리를 시계열로 측정하였으며, 부단은 정책의 시행에 앞서 해당 정책이 국민의 행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행복지표의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2년 정립된 충남 행복지표 측정틀에 의해 도민의 행복지표를 측정하고 도민의 행복에 대한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2년 연구에서는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와 사례 등을 통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남도가 관리해야 할 행복지표를 선정하여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조사하여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과 정책연계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행복연구에서는 지표체계에 대한 검증을 비롯하여 측정결과의 축적과 변화를 점검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 1)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 및 정책방향 그리고 정책연계 방안 모색으로 구성된다.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은 선행연구에 의해 개발된 충남 행복지표 및 이의 측정틀에 기초하여 이뤄진다. 이를 위해 충남 행복지표 개발 결과를 검토하고, 행복지표의 측정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며, 실제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를 측정한다. 충남 행복지표 측정틀에 기초하여, 기존 통계자료(통계청 자료, 충남도청 행정자료 등)를 활용한 객관적 지표를 측정하고 충남사회조사(2012년과 2013년) 결과를 이용한 주관적 지표를 측정한다. 다만 사회조사에서 측정되지 못한 정성지표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반영토록 한다. 객관적 지표는 시계열 자료의 확보 및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의 변화와 이로 인한 도민 행복감의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

또한, 측정된 객관적 지표와 충남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충남 도민의 행복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최근의 연구는 행복에 있어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 충남 도민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나아가, 충남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충남 행복지표 측정틀에서 정한 영역별 세부지표에 대하여 정성적인 현재의 상태를 파악한다. 설문조사의 대상을 계층별로 다양화-이틀테면, 소득수준, 학령층 자녀 유무, 결혼여부, 연령대 등에 따른 계층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도출한다.

측정된 행복지수와 정책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탄의 GNHC나 일본의 웰빙측정위원회에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책결정관련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실제로 측정된 행복지표와 도민의 행복에 대한 정성적 수준을 정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2)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절차

본 연구의 추진은 연구원의 내부연구진을 중심으로 전문가로 이뤄진 외부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의 방향설정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연구의 진행에 맞춰 설문조사, 세미나, 설문조사, 워크숍을 추진한다.

〈그림 1-2〉 연구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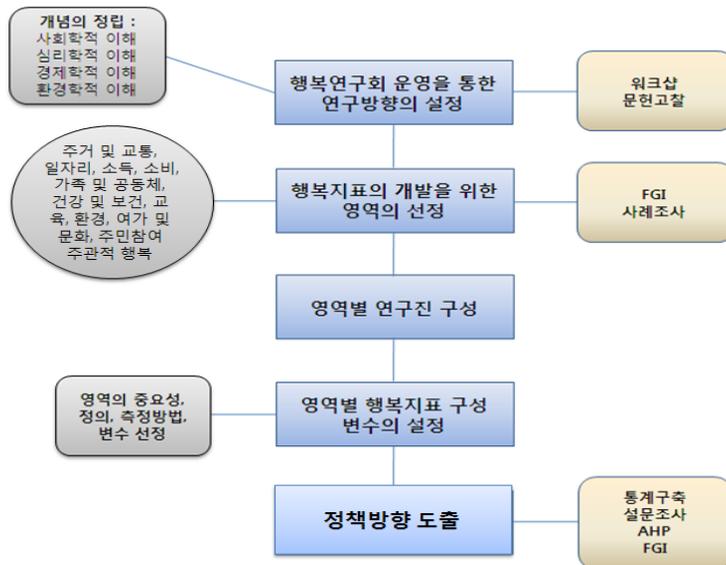
## 제2장 행복도 측정을 위한 충남의 행복지표개발

### 1.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개발 과정 및 절차

#### 1) 2012년 행복지표 개발의 추진절차

지난 2012년 추진된 행복지표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행복에 대한 개념정립과 행복지표의 개발을 중점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행복지표의 개발은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하기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선정된 각 영역별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행복지표를 구성하고 이에 전문가 워크숍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중요변수 등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복지표가 개발되었다.

〈그림 2-1〉 2012년 행복지표 개발체계



## 2) 영역의 설정

행복지표의 측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 세부지표를 선정하여 행복지표를 개발함과 동시에 영역 간 혹은 세부지표 간 가중치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영역의 설정과 영역별 세부지표의 선정은 고승희 외(2012)에 기초하며 영역간 가중치 설정은 점수화의 문제와 연계되어 향후 연구에 반영토록 한다. 연구결과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면, 우선 영역의 설정은 행복이나 삶의 질 혹은 주관적 웰빙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행복지표의 보편성을 유지하되 충남의 여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영역은 주거/교통, 일자리/소득/소비, 가족/공동체, 교육, 문화/여가, 환경, 건강/보건, 주민참여, 주관적 웰빙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개별 영역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sup>1)</sup>

### ① 주거/교통

우리나라의 도시는 양적인 개발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물리적인 요소를 투입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에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문화와 같은 창조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혁신의 시대를 거치고 있다. 장기적이고 거대한 인프라(infra) 중심에서 미시적인 생활공간과 공적인 장소가 점점 중요해진 것이다. 주거/교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대량생산시대의 패러다임이 남긴 지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품종·소량 생산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정의 슬로건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은 우리 모두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각 부분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우리의 일상공간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민이 행복한 삶에 대한 물리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교통은 충남의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

1)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개별 영역의 중요성은 고승희 외(2012)에서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 ② 일자리/소득/소비

일자리/소득/소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삶의 만족지수는 OECD의 평균인 0.69를 크게 하회하는 0.45로 전체 조사대상 26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하여 경제적 요인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자리는 근로소득의 원천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사회 내에서의 자아감, 개인적 자부심 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실업은 소득의 상실로 인한 금전적 효과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효과-즉, 사회적 관계나 사회 내에서의 존재감 혹은 개인적 자부심의 감소를 지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 혹은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행복에서 일자리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의 행복지표표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 ③ 가족/공동체

가족은 개인이 출생 후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1차적인 집단이며 모든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근본적 원천이다. 구체적으로 구성원 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너무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이웃공동체와 친구공동체는 사회적 연결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다. 이웃이나 친구 등 공동체 소속감과 더불어 사회신뢰, 사회영향 등에 대한 부분으로 삶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현대 사회는 급격한 개인주의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삶의 질에서 공동체가 갖은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사회동체의미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 ④ 교육

20세기 들어 민주화 흐름과 맞물려 교육받을 권리가 확산되고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운영하는데 시민들의 교육수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현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양을 갖추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교육이 공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확장되고 학습대상이 되는 지식과 숙련의 내용이 고도화되면서 한 사람의 개인 생애에서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사회적 투자도 늘어났다. 교육은 한

사람의 생애에만 중요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재생산에도 중요하고 그 강한 외부효과로 인하여 공공재(public good)적 성격을 갖거나 또는 공공선(common good)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공재적 성격은 공동체의 인적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개발, 민주주의 운영,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공동체가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수준과 사회가 교육에 투자하는 수준이 또한 중요하다.

#### ⑤ 문화/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소득이나 건강, 주거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삶의 활력과 휴식, 재충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문화와 여가 생활은 직업적인 문화활동이 아닌 경우 개인에게는 비경제적 활동이지만,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며, 여가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시켜줌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를 논하지 않더라도 문화·여가가 개인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화·여가는 전통적으로 기본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노동에 대해 대비되는 것으로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개인이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⑥ 환경

환경이란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존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상태를 일컫는다. 일정한 범위에 있는 모든 생물은 무기적 환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생물의 다양성 및 물질 순환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과도한 생산 활동 결과에 의한 환경오염은 수많은 동·식물 서식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인간의 행복은 보장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이로 인한 각종 재앙이 20세기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과도한 활동으로 나타나는 환경오염의 피해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특징이 있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태계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항상 평형이 유지될 때 인간의 건강한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는 개념 하에 인간과 환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써 인간이 살고 있는 주변요소 모두를 포함하려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 ⑦ 건강/보건

건강 및 보건과 관련하여 건강은 유전적 구성이나 생활습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삶의 유형에도 영향을 받으며 이들 대부분은 보건이나 이와 연관된 정책들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WHO(1948)는 건강한 상태를 완전한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well-being)의 상태라고 광의적으로 정의하며, 이는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의는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건강의 주관적인 측면이 모두에게 있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건강상태는 본연적인 가치와 함께 수단적인 가치 두 측면 모두에서 행복과 깊은 관계를 나타내고 지역 내 의료시설 혹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나 질은 이러한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보건 영역을 충남 행복지표에 포함함으로써 보건관련 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우선 수단을 찾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 ⑧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주민참여는 공식적 행정조직의 외부에서 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정조직의 목표설정과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 사회의 일반문제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민참여는 사람들이 표현하고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행복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와 사회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기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민참여는 개인의 삶에 대한 조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감각을 지니게 하며,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 이외에도 주민참여는 공공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정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을 높인다. 주민들이 내는 정치적 목소리는 충돌과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향후 정책의 전망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여 주민과 정부 간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정책결정자의 책임을 증가시켜 정책준수와 함께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⑨ 주관적 웰빙

웰빙과 사회발전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GDP로 대표되는 경제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적으로서 ‘주관적 웰빙’의 중요성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사회발전의 최종 목표가 경제성장이지 아닌 ‘좋은 사회(good society)’, 개별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행복한 사회라고 한다면, 객관적 지표와 함께 평가주체인 구성원의 주관적 웰빙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행위가 객관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지만, 그런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인간의 인식 및 평가과정을 거쳐 반응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주관적 웰빙’은 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주관적 웰빙에 대한 측정이 국가통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 생산과 함께 정책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3) 영역별 세부지표의 선정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개별 영역의 세부지표는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후보군을 정한 후에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결과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 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을 포함한다. 결과지표에 대한 기준은 해당 세부지표가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outcome)를 나타내는 변수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계열 측정에 대한 기준은 해당 세부지표가 연도별로 측정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며, 가변성은 적어도 연도별로 해당 세부지표가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편성은 해당 세부지표가 삶의 질이나 웰빙 혹은 행복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며, 영역 간 중복은 해당 세부지표가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들 가운데 하나의 영역에만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간결성은 해당 세부지표가 일반인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적용성은 해당 세부지표가 충남에 대해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세부지표들을 가지고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천 여명을 대상으로 영역별 세부지표에 대한 우선순위와 영역별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문항을 포함하였다. 결국, 충남 행복지표의 개발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영역의 설정과 선정기준과 도민 의견반영을 통한 영역별 세부지표의 선정을 통해 이뤄졌다.

## 2. 개발 결과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개별결과를 요약하면, 영역은 주거/교통, 일자리/소득/소비, 가족/공동체, 교육, 문화/여가, 환경, 건강/보건, 주민참여, 주관적 웰빙을 포함하며 영역별 세부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된다.

주거/교통영역의 세부지표는 주거와 관련하여 주택전세가격지수와 주택(주거환경) 만족도를 포함하고, 교통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을 포함하며, 공원 및 생활편의과 관련해서는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을 포함하고, 안전측면에서는 범죄발생건수와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포함한다.

일자리/소득/소비영역의 세부지표는 고용상태와 관련하여 청년층 고령층의 고용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실업률, 비농가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고 근무환경 측면에서는 실질임금 총액, 성별 임금격차,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가족/공동체의 세부지표는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가족접촉 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갈등, 가족폭력을 포함하고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한 부모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소년 소녀 가장 비율을 포함한다. 일·가족 양립과 관련하여 부정적 일가족 전이, 부정적 가족전이를 포함하고,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가까운 친구 수,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한다. 또한 공동체 참여와 관련하여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포함하며 사회적 신뢰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의 세부지표는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영유아교육 접근성, 고등교육 접근성, 평생교육 접근성, 계열 혹은 전공 만족도를 포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 1인당 장서 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효과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성과 측면에서는 성적, 학습시간, 학습내용 만족도, 학습결과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다.

문화/여가의 세부지표는 기존 지표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 여부,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가 포함되며 문화 자원 및 문화 활동 측면에서는 지역자원 파악, 지역 자원활용 여부, 지역자원(시설) 변화가 포함된다. 만족도 조사 측면에서는 삶의 만족도 변화, 문화·여가활동 만족도를 포함한다.

환경의 세부지표는 물과 관련하여 하천수질, 호소수질, 수질만족도를 포함하고 폐기물과 관

련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율, 주변 청결상태를 포함하며, 환경보건 측면에서는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율, 건강위험을 포함한다.

건강/보건의 세부지표는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출생시 기대수명,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흡연율과 음주량,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포함하며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 혹은 병상 수, 의료비 본인부담률,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

주민참여의 세부지표는 참여기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도정에 대한 만족도, 정책인지를 포함하며 참여와 관련하여 투표율, 영향도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와 관계하여 청렴도, 정보 공개율, 신뢰가 포함된다.

〈표 2-1〉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활용자료	주관적 지표
주거 및 교통 부문	주거	주택전세가격지수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주택(주거환경) 만족도
	교통	교통사고 발생건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공원 및 생활편익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
	안전	범죄발생건수	KOSIS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일자리· 소득· 소비 부문	고용상태	고용률(청년층, 고령층)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실업률	KOSIS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비농가 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조사필요 KOSIS	
	근무환경	실질임금 총액 성별 임금격차	사회조사 노동부 (조사미흡)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
가족 및 공동체 부문	가족관계	-		가족접촉 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 갈등 가족 폭력
	가족형태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소년 소녀 가정 비율	통계청 통계청 보건복지부	-
	일·가족 양립	-		부정적 일가족 전이 부정적 가족 전이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수 자살률	조사필요 통계청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 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조사필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활용자료	주관적 지표
	사회적 신뢰	-		사회적 신뢰
교육 부문	교육기회	영유아교육 접근성 고등교육 접근성 평생교육 접근성	조사필요 (타 조사와 연계)	계열 혹은 전공 만족도
	교육여건	교원 1인당 학생수 1인당 장서 수	교과부 (조사필요)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효과성
	교육성과	성적 학습시간		학습내용 만족도 학습결과 만족도
문화· 여가 부문	기존 지표활용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 여부 국내관광여행 여부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
	문화 자원 및 문화 활동	-		지역 자원과악 지역 자원활용 여부 지역자원(시설) 변화
	만족도 조사	-		삶의 만족도 변화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환경 부문	물	하천수질 호소수질	환경부 물환경정보	수질만족도
	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율	환경부 폐기물현황	주변 청결상태
	환경보건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율	환경부 (도자료 미흡)	건강위협
건강· 보건 부문	건강 상태	출생시 기대수명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인구 천명당 중증 암환자수) 흡연율과 음주량	KOSIS 사회조사보고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료 서비스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 수 의료비 본인부담률	KOSIS 사회조사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주민 참여 부문	참여기반에 대한 인식	-		도정에 대한 만족도 정책인지
	참여	투표율	선관위	영향도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신뢰	청렴도 정보공개율	국민권익위 안행부	신뢰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경험	-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대한 경험 여부
	심리적 번영	-		심리적 웰빙의 관점에서 개 인의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 한 희망정도
	성격 측정	-		외향성(결과분석시 통제변수로 활용)

출처 : 고승희 외(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충남발전연구원

## 제3장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

### 1. 측정 방법

기 개발된 행복지표의 측정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정량지표의 측정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 정성지표의 측정을 포함한다. 또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 충청남도에서 조사한 사회조사 지표를 사용하여 요인을 파악하였다.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을 위해 우선 앞에서 요약된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에 포함된 영역별 세부지표의 정의, 타 광역시도 대비 충남의 수준, 시계열 추세, 그리고 도내 시군 간 차이에 대해 정리한다. 특히, 세부지표에 대한 이러한 기준에서의 검토를 통해, 지표로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측정이 불가능한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대체가능한 대안 지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와 충청남도의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토록 한다.

정성지표의 경우 충남 15개 시군 1,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10일부터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정성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는 단순히 정량지표에 의존한 수준별 측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바람을 제시하는 결과로서 향후 정책적 우선순위를 찾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지표는 충청남도 지역 거주지 20세 이상의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대면방식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구 분	주 요 내 용
모 집 단	충청남도 지역 거주자(20세 이상 성인)
표 본 수	1,089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최대허용 오차 ±2.9%
조사방법	직접대면방식
표본추출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
분석방법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조사일시	2013년 9월 28일 ~ 29일
조사기관	사단법인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총 1,089명에 이르는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469명(43.1%), 여성 576명(52.9%)으로 여성의 응답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20세~29세 279명(25.6%), 30~39세 227명(20.8%), 40세~49세 230명(21.1%), 50세~59세 233명(21.4%), 60세 이상 103명(9.5%)으로 대체적으로 20대 응답자가 많았다. 지역은 계룡시 34명(3.1%), 공주시 65명(6%), 금산군 44명(4%), 논산시 62명(5.7%), 당진시 78명(7.2%), 보령시 62명(5.7%), 부여군 54명(5%), 서산시 83명(7.6%), 아산시 123명(11.3%), 예산군 72명(6.6%), 천안시 226명(20.8%), 서천군 45명(4.1%), 청양군 35명(3.2%), 태안군 45명(4.1%), 홍성군 61명(5.6%)으로 천안·아산시 응답자가 많았다.

〈표 3-1〉 표본의 인구계학적 특성

	구분	표본수(명)	비율(%)
지역	계룡시	34명	3.1%
	공주시	65명	6%
	금산군	44명	4%
	논산시	62명	5.7%
	당진시	78명	7.2%
	보령시	62명	5.7%
	부여군	54명	5%
	서산시	83명	7.6%
	아산시	123명	11.3%
	예산군	72명	6.6%
	천안시	226명	20.8%
	서천군	45명	4.1%
	청양군	35명	3.2%
	태안군	45명	4.1%
홍성군	61명	5.6%	
성별	남성	469명	43.1%
	여성	576명	52.9%
	결측	44명	4%
연령	20 - 29세	279명	25.6%
	30 - 39세	227명	20.8%
	40 - 49세	230명	21.1%
	50 - 59세	233명	21.4%
	60세 이상	103명	9.5%
	무응답	17명	1.6%

## 2. 영역별 세부지표의 측정

### (1) 주거 및 교통

#### ① 주택전세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주택가격지수(Korea Housing Price Index)중 하나로 전세가격 기준시점과 매기 조사되는 조사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2012년 11월을 기준시점(2012. 11 지수= 100.0)으로 하여 주택전세가격 변동률은 가격지수의 두 시점 간 비율을 의미하고 백분비(%)로 표기하고 있다.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주거환경의 질이 지속가능한지, 소득과 연령, 능력에 관계없이 주거선택의 가능성과 정주성이 높은 사회인지를 측정할 때 활용하고 있다.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2003년 72.0에서 2012년 11월 현재 98.7까지 26.7만큼 증가한데 비해,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03년 76.3에서 2012년 11월 현재 95.9까지 19.6만큼 올라가 그 증가폭은 전국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 2003년 대비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지수의 증가폭은 23.7인데, 이는 울산(37.4), 경기(32.0), 전북(31.8), 전남(31.6)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림 3-1〉 연도별 주택가격지수



주 : (2012. 11 지수= 100.0)  
출처 : KOSIS

주택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이 전월 대비 1.32% 증가하였는데 비해, 충남은 4.28% 증가하여 2.96만큼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주택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당월과 전월의 지수 비율로 전월 대비 평균적인 가격 증감률을 의미한다.

〈그림 3-2〉 지역별 주택가격지수



주 : (2012. 11 지수= 100.0)  
출처 :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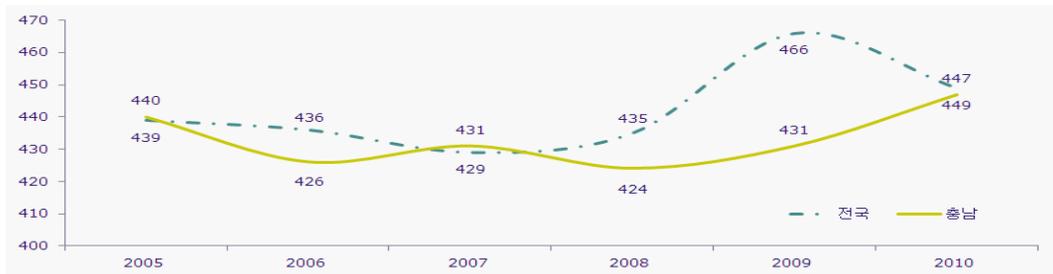
②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인구 10만명 당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로 정의한다. 교통사고는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는 지방정부에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현재 447.2건으로 전국평균(449.1건)을 하회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율은 2005년 대비 연평균 0.3%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증가율 평균치(0.5%)를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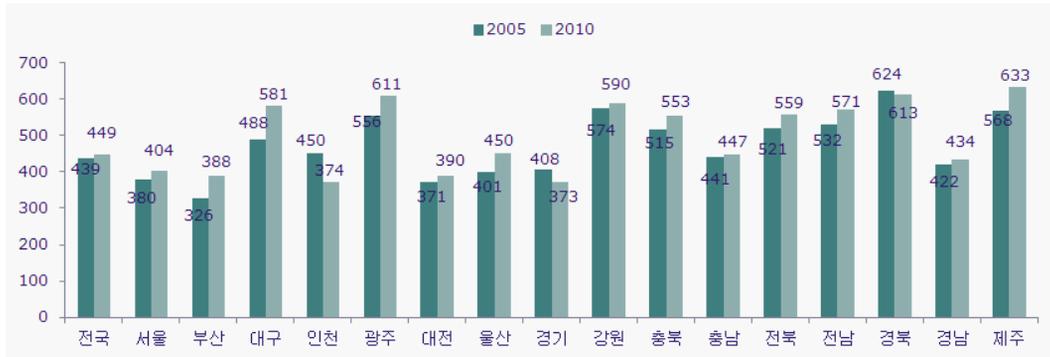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인천(-3.7%), 경기(-1.8%), 경북(-0.3%)이 전국 교통사고 평균 증가율을 밑돌았으나, 대구(3.6%), 부산(3.5%), 제주(2.2%)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출처 : KOSIS

〈그림 3-4〉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출처 : KOSIS

### ③ 공원면적

공원면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및 녹지 중에서 실제로 조성된(집행된) 공원 및 녹지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면적으로 정의한다. 즉, 1인당 공원면적(m<sup>2</sup>)은 공원면적(m<sup>2</sup>)/인구수로 산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인 1인당 6m<sup>2</sup> 이상을 충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충남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11년 현재 10.7m<sup>2</sup>로 전국 평균(9.9m<sup>2</sup>)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충청남도의 1인당 공원면적 증가율도 2005년 대비 연평균 8.3%씩 증가하고 있어 전국 평균 증가율(4.9%)을 상회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15.4%), 경남(8.5%), 충남(8.3%)이 전국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 면적 평균 증가율(4.9%)을 상회하였고, 충북(-15.9%), 대전(-5.2%), 제주(-2.8%)는 전국 평균 증가율을 밑돌았다.

〈그림 3-5〉 연도별 1인당 공원면적(㎡)



출처 : KOSIS

〈그림 3-6〉 지역별 1인당 공원면적(㎡)



출처 : KOSIS

#### ④ 범죄발생건수

범죄발생건수는 인구 십만명당 총 범죄발생건수로 정의한다. 범죄발생건수는 형법범죄와 특별범죄 발생건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범죄발생건수는 사회의 안전하거나 또는 위험한 정도,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환경을 잘 나타내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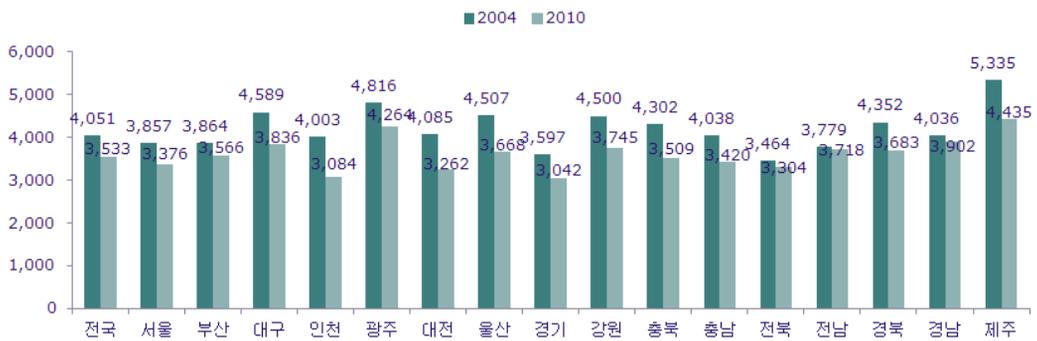
충청남도의 범죄발생건수는 2010년 현재 3,420건으로 전국 평균(3,533)보다 적은 편이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범죄발생건수 증가율은 2004년 대비 연평균 2.7%씩 감소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범죄발생건수는 지역별로 인천(-4.3%), 울산(-3.4%), 충북(-3.3%) 등이 전국 평균(-2.3%)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 3-7〉 연도별 범죄발생건수(건)



주 :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출처 : KOSIS

〈그림 3-8〉 지역별 범죄발생건수(건)



주 :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출처 : KOSIS

⑤ 주거 및 교통 부문 정성평가 결과

주거 및 교통 부문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5.7점이며, 교통시설 편리성은 5.3점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은 5.4점으로 측정되었다. 주거환경 만족도 (5.7점)는 ‘교통시설의 편리성’ 과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성’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주거 및 교통 부문 만족도

구분		평균
주거 및 교통	주거환경 만족도	5.7
	교통시설 편리성	5.3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성	5.4

(2) 일자리/소득/소비

①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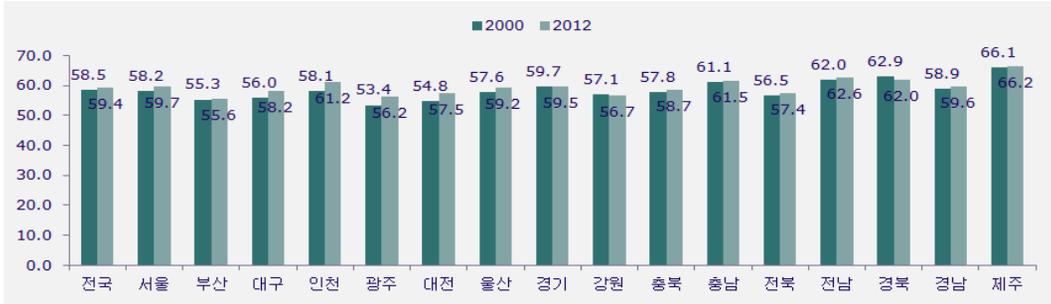
고용률(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은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 취업인구비율이라고도 불리며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나타낸다.

$$\text{고용률} = \frac{\text{15세 이상 취업자}}{\text{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times 100$$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반면, 고용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계산된다.

2012년 충남의 고용률은 61.5%로 전국의 59.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타 시도에 비교해서는 제주(66.2%), 전남(62.6%), 경북(62.0%) 다음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그림 3-9〉 지역별 고용률(%)



주 : 구직기간 4주 기준  
출처 : KOSIS

충남 고용률의 2000년 이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64.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2010년 60.4%까지 급속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계열 변화는 전국의 그것과 대체로 유사하나, 2007년까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전국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림 3-10〉 연도별 고용률(%)



주 : 구직기간 4주 기준  
출처 : KOSIS

도내 시군 간 비교에서는 2010년을 기준으로 태안군이 70.5%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은 청양군(67.9%), 금산군(66.6%) 등의 순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2008~2010년 기간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금산군이 5.6%p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반면 다수의 지역들에서 고용률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3〉 도내 시군별 고용률

(단위: %)

	2008	2009	2010
천안시	59.9	59.3	58.5
공주시	57.4	59.7	58.6
보령시	57.3	59.3	60.9
아산시	61.9	59.4	60.0
서산시	62.3	62.7	64.2
논산시	62.5	59.8	59.7
계룡시	48.3	48.6	50.9
금산군	61.0	59.3	66.6
연기군	53.8	57.0	57.5
부여군	65.0	64.0	61.3
서천군	64.0	61.1	62.7
청양군	69.3	66.2	67.9
홍성군	60.7	60.2	59.9
예산군	62.2	63.6	60.1
태안군	69.5	69.0	70.5
당진군	67.1	62.0	64.4

출처 : KOSIS

②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만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text{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times 100$$

따라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계산된 비율이며, 충남은 2012년에 50.9%를 기록하여 제주, 전남, 경북, 인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그림 3-11〉 지역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주 : 구직기간 4주 기준  
출처 : KOSIS

시계열 변화를 보면, 충남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의 그것에 비해 연도별 변화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에 전반적으로 충남은 전국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2007년에는 55.0%를 기록하여 전국에 비해 4.8%p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2〉 연도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주 : 구직기간 4주 기준  
출처 : KOSIS

### ③ 여성실업률

여성실업률에 있어서, 충남은 2012년에 2.4%로 전국의 3.0%에 비해 낮으며 제주, 전남, 전북, 충북, 경남, 경북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3〉 지역별 여성실업률(%)



주 : 구직기간 4주 기준  
출처 : KOSIS

2000년대 연도별 여성실업률을 살펴보면, 충남은 전국에 비해 항상 낮아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된다.

〈그림 3-14〉 연도별 여성실업률(%)



주 : 구직기간 4주 기준  
출처 : KOSIS

#### ④ 실질임금 총액

「2012년 충남사회조사」에 의한 도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분포를 살펴보면, 1백만원 미만인 29.3%,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21.9%,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인 21.3%, 3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인 13.7%, 4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인 6.9%, 5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인 3.4%, 6백만원 이상 7백만원 미만인 1.3%, 그리고 7백만원 이상이 2.2%로 나타난다.

〈표 3-4〉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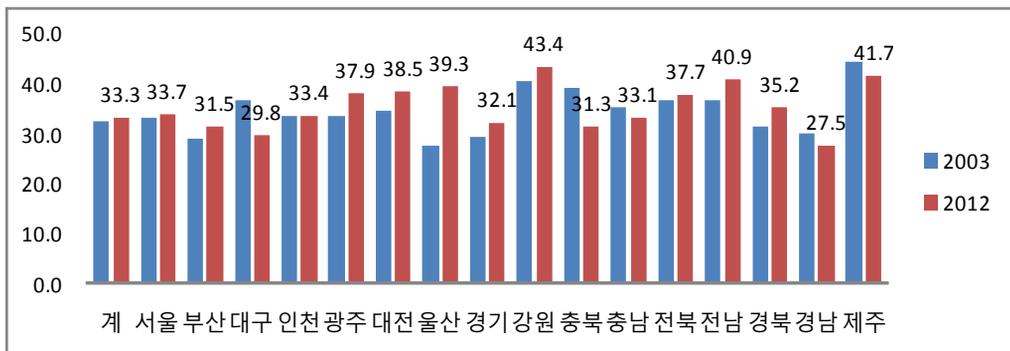
		사례수	1백만원 미만	1백만~2백만원	2백만~3백만원	3백만~4백만원	4백만~5백만원	5백만~6백만원	6백만~7백만원	7백만원 이상
성별	전체	15,000	29.3	21.9	21.3	13.7	6.9	3.4	1.3	2.2
	남자	11,365	21.2	21.7	24.4	16.3	8.2	4.0	1.5	2.6
	여자	3,635	56.5	22.3	11.0	5.1	2.6	1.1	0.5	1.0
연령별	20대 이하	924	48.1	23.2	18.8	7.0	1.9	0.8	0.1	0.2
	30대	2,163	3.7	20.6	37.5	20.7	9.6	4.0	1.5	2.3
	40대	2,897	6.8	17.1	26.8	23.9	12.9	6.2	2.2	4.1
	50대	2,854	13.4	25.0	23.0	16.5	10.2	5.5	2.3	4.1
	60대 이상	6,162	59.2	23.4	9.8	4.3	1.5	0.9	0.4	0.5
학력별	초졸 이하	4,709	67.7	20.1	7.3	2.5	1.3	0.4	0.3	0.4
	중졸 이하	1,650	31.9	35.0	18.2	8.1	3.2	1.5	0.6	1.6
	고졸 이하	4,324	12.1	27.0	29.8	17.3	7.5	3.4	1.1	1.9
	대학 이상	4,317	13.9	14.1	25.4	21.2	12.2	6.4	2.5	4.3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	7,318	47.6	24.9	14.0	7.1	3.1	1.5	0.6	1.1
	아파트	5,953	12.2	18.1	27.4	20.5	11.0	5.2	2.1	3.6
	기타	1,729	27.9	24.8	24.6	12.2	5.5	3.3	0.6	1.1
시군별	천안시	2,160	17.0	22.3	24.1	17.9	10.1	4.0	1.6	2.9
	공주시	900	41.6	20.3	15.2	9.8	7.2	3.0	0.6	2.3
	보령시	900	37.9	21.4	20.4	9.1	6.3	3.0	0.6	1.2
	아산시	1,460	21.8	21.0	24.7	16.3	8.3	4.2	1.6	2.1
	서산시	1,140	23.7	19.0	23.7	15.1	7.9	4.8	1.9	3.9
	논산시	960	40.0	24.6	18.2	10.3	3.3	2.0	0.7	0.8
	계룡시	800	12.0	15.4	21.6	20.4	14.5	8.4	4.1	3.6
	당진시	1,060	25.3	21.7	29.3	13.0	4.2	3.2	1.2	2.0
	금산군	800	48.8	26.3	13.5	6.8	1.5	1.4	0.6	1.3
	부여군	800	50.0	21.0	14.7	8.0	2.7	1.6	1.1	0.7
	서천군	800	56.5	18.6	11.1	7.0	3.2	1.5	0.7	1.2
	청양군	800	38.5	21.2	14.6	7.0	5.6	2.6	1.0	9.4
	홍성군	820	43.3	22.4	13.3	13.4	4.3	2.0	0.5	0.9
	예산군	800	40.9	24.5	16.8	9.9	4.3	1.8	1.4	0.6
	태안군	800	33.7	26.2	20.1	11.9	4.2	2.7	0.2	0.7

자료 : 「2012년 충남사회조사」

⑤ 비정규직 비중

2012년 8월 기준 충남의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704천명 중 233천명으로 약 3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제주도가 41.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원도 43.36%, 전남 40.9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이 27.45%, 울산 29.32, 대구 29.80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인천 33.36%, 경북 35.17%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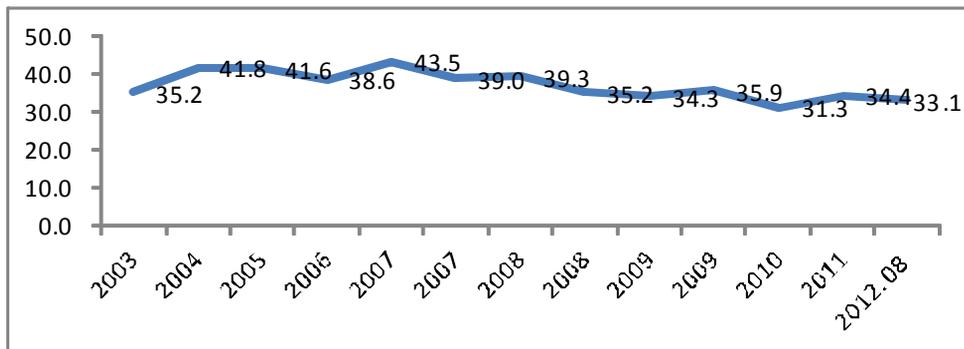
〈그림 3-15〉 지역별 비정규직 비중(%)



출처 : KOSIS

연도별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을 정점으로 2009년과 2011년의 경우 전년대비 상승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3-16〉 연도별 비정규직 비중(%)



출처 : KOSIS

⑥ 소비

「2012년 충남사회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비나 외식비가 4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61.0%에 달하며 20만원 미만인 경우도 3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5〉 가구당 월평균 지출비(식료품/비주류 음료비 및 외식비)

(단위: %)

		사례수	20 만원 미만	20~40 만원 미만	40~60 만원 미만	60~80 만원 미만	80 ~100 만원 미만	100 ~120 만원 미만	120 ~140 만원 미만	140 ~160 만원 미만	160 ~180 만원 미만	180 ~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없음
성 별	전체	14,988	34.2	26.8	19.1	8.0	5.9	2.8	1.2	0.9	0.3	0.3	0.3	0.3
	남자	11,355	27.6	27.6	21.4	9.3	7.0	3.4	1.4	1.1	0.4	0.3	0.3	0.2
	여자	3,633	56.0	24.2	11.5	3.6	2.0	1.1	0.6	0.3	0.1	0.0	0.1	0.6
연 령 별	20대 이하	924	45.0	30.2	15.9	4.7	2.3	0.9	0.5	0.0	0.0	0.2	0.2	0.2
	30대	2,162	13.7	27.8	28.7	11.8	9.6	3.8	2.1	1.4	0.6	0.3	0.1	0.0
	40대	2,896	14.8	25.7	25.9	12.0	10.5	5.4	2.4	1.6	0.6	0.4	0.6	0.1
	50대	2,851	26.3	29.1	20.9	9.7	6.5	3.9	1.1	1.0	0.4	0.5	0.4	0.3
	60대 이상	6,155	57.3	25.0	10.1	3.4	1.8	0.7	0.4	0.3	0.1	0.1	0.1	0.6
소 득 별	100만원 미만	4,921	70.9	21.4	5.2	1.1	0.4	0.1	0.0	0.0	0.0	0.1	0.0	0.7
	100-200만 미만	3,255	33.0	37.7	19.8	5.3	2.7	0.7	0.4	0.3	0.0	0.0	0.0	0.1
	200-300만 미만	2,968	17.0	31.1	28.5	11.0	7.4	2.9	1.0	0.5	0.2	0.0	0.1	0.2
	300-400만 미만	1,878	10.7	24.1	28.7	13.7	10.7	6.4	2.5	1.9	0.7	0.4	0.3	0.0
	400-500만 미만	945	8.1	18.4	24.3	16.0	14.5	8.8	3.9	2.7	1.7	0.4	0.8	0.3
	500만원 이상	1,021	7.2	15.7	22.1	16.8	16.3	7.9	4.7	4.0	0.9	2.4	1.9	0.0
시 군 별	천안시	2,160	22.9	29.0	24.5	8.7	6.8	3.6	1.8	1.6	0.4	0.4	0.1	0.2
	공주시	899	42.4	23.8	17.5	6.2	5.3	2.0	1.1	0.7	0.2	0.4	0.2	0.1
	보령시	900	32.8	32.3	18.1	7.6	5.4	2.0	0.8	0.7	0.2	0.1	0.0	0.0
	아산시	1,459	25.8	28.0	21.1	11.0	7.5	3.7	1.0	1.0	0.2	0.4	0.3	0.1
	서산시	1,140	26.0	23.3	23.1	10.4	8.1	3.5	2.5	1.1	0.5	0.0	0.9	0.8
	논산시	960	47.9	25.3	12.4	8.0	3.6	1.1	0.4	0.3	0.3	0.0	0.4	0.1
	계룡시	799	21.2	23.4	20.9	10.8	11.5	6.3	2.4	1.4	0.8	0.8	0.8	0.0
	당진시	1,060	35.1	27.1	19.1	8.1	5.2	3.2	0.8	0.3	0.5	0.3	0.3	0.2
	금산군	800	46.1	31.3	13.8	3.8	2.5	1.4	0.4	0.3	0.0	0.0	0.1	0.5
	부여군	800	66.6	17.5	6.1	4.2	2.4	1.1	0.6	0.2	0.1	0.5	0.1	0.4
	서천군	799	51.9	28.0	11.1	3.6	3.1	1.0	0.4	0.1	0.3	0.3	0.1	0.0
	청양군	796	58.2	24.5	11.9	1.4	1.9	0.6	0.3	0.0	0.0	0.0	0.1	1.1
	홍성군	820	42.1	23.8	14.9	5.4	6.6	3.4	1.3	0.6	0.2	0.1	0.1	1.5
예산군	797	49.4	23.2	15.4	4.5	3.3	1.6	1.1	0.8	0.0	0.0	0.3	0.4	
태안군	799	40.6	27.4	13.9	8.8	5.6	2.1	1.0	0.5	0.0	0.0	0.1	0.0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2

소득대별 식료품이나 외식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을 보면,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70.9%의 가구가 20만원 미만을 식료품이나 외식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보건이나 의료에 대한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2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77.0%로 나타나며, 소득대별 분포에 따른 비중이 이와 유사함을 볼 때 이는 지출여력에서의 제약에 의한 것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시와 군을 비교해 보면 시에 거주하는 도민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시군 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서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3-6〉 가구당 월평균 지출비(보건/의료비)

(단위: %)

		사례수	20 만원미만	20~40 만원미만	40~60 만원미만	60~80 만원미만	80~100 만원미만	100 만원이상	없음
전체		14,921	77.0	12.2	3.6	1.0	0.7	0.5	4.9
성 별	남자	11,317	75.1	13.5	4.1	1.1	0.8	0.5	4.8
	여자	3,604	83.7	8.0	2.2	0.4	0.3	0.2	5.1
연 령 별	20대 이하	898	70.4	4.8	2.1	0.3	0.2	0.5	21.6
	30대	2,155	75.6	13.0	3.8	1.0	0.8	0.2	5.5
	40대	2,885	78.2	11.5	3.6	0.8	1.0	0.6	4.5
	50대	2,842	74.3	13.9	4.8	1.3	0.9	0.5	4.1
	60대 이상	6,141	79.8	13.0	3.3	1.0	0.6	0.5	1.8
소 득 별	100만원 미만	4,881	81.8	9.0	1.6	0.3	0.1	0.3	6.9
	100-200만 미만	3,246	77.8	11.5	3.0	0.8	0.7	0.4	5.9
	200-300만 미만	2,961	76.3	12.4	4.1	1.4	0.9	0.5	4.3
	300-400만 미만	1,874	74.4	15.3	5.0	1.0	1.8	0.4	2.1
	400-500만 미만	941	72.8	16.4	5.9	1.1	0.4	0.5	2.9
500만원 이상	1,018	66.2	17.5	8.1	2.7	1.2	1.5	2.7	
시 군 별	천안시	2,126	74.2	12.2	4.4	1.0	0.8	0.5	7.0
	공주시	895	73.4	15.0	3.8	0.9	0.6	0.7	5.7
	보령시	900	79.4	13.7	3.3	0.9	0.4	1.0	1.2
	아산시	1,455	77.3	10.2	2.7	0.8	0.5	0.7	7.8
	서산시	1,137	78.6	12.7	3.1	1.3	1.3	0.5	2.5
	논산시	959	77.6	13.9	2.9	1.1	0.6	0.3	3.5
	계룡시	798	75.6	14.0	5.3	1.9	1.0	0.4	1.9
	당진시	1,055	68.1	17.1	5.8	1.5	0.6	0.2	6.8
	금산군	800	89.3	5.4	2.3	0.1	0.5	0.4	2.1
	부여군	800	85.0	9.4	2.2	0.6	0.6	0.2	1.9
	서천군	797	82.3	11.5	3.0	0.6	0.8	0.3	1.5
	청양군	783	80.2	12.1	1.8	0.1	0.5	0.0	5.2
	홍성군	820	83.8	10.9	1.7	0.5	0.4	0.1	2.7
	예산군	798	82.7	9.8	3.3	1.0	1.1	0.6	1.5
태안군	798	76.1	13.0	5.9	1.3	0.9	0.3	2.6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2

통신비 지출에 있어서는 80.1%의 가구가 월평균 20만원 미만을 지출하며, 대체로 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7〉 가구당 월평균 지출비(통신비)

(단위: %)

		사례수	20 만원미만	20~40 만원미만	40~60 만원미만	60~80 만원미만	80~100 만원미만	100 만원이상	없음
전체		14,946	80.1	15.2	2.3	0.4	0.3	0.2	1.5
성 별	남자	11,336	77.5	17.9	2.7	0.5	0.3	0.2	0.9
	여자	3,610	88.8	6.3	0.9	0.1	0.2	0.1	3.6
연 령 별	20대 이하	924	89.8	7.0	1.1	0.2	0.3	0.5	1.2
	30대	2,160	77.7	18.3	2.5	0.6	0.6	0.1	0.1
	40대	2,894	65.3	28.9	4.2	0.7	0.4	0.2	0.3
	50대	2,849	72.4	22.3	3.7	0.5	0.3	0.2	0.6
	60대 이상	6,119	91.9	3.7	0.5	0.1	0.1	0.0	3.5
소 득 별	100만원 미만	4,888	93.3	1.8	0.2	0.0	0.1	0.1	4.5
	100~200만 미만	3,248	88.9	8.5	1.3	0.2	0.3	0.1	0.6
	200~300만 미만	2,967	78.1	18.4	2.5	0.6	0.0	0.2	0.2
	300~400만 미만	1,878	68.6	26.0	3.8	0.8	0.5	0.1	0.1
	400~500만 미만	943	56.3	38.2	3.9	0.4	0.8	0.1	0.3
500만원 이상	1,022	49.5	39.1	9.0	1.1	1.0	0.3	0.1	
시 군 별	천안시	2,157	76.1	19.9	2.7	0.5	0.4	0.2	0.3
	공주시	894	78.3	14.4	2.2	0.3	0.4	0.1	4.1
	보령시	900	82.9	13.3	2.4	0.4	0.1	0.1	0.7
	아산시	1,457	82.2	13.9	1.8	0.3	0.1	0.1	1.6
	서산시	1,139	78.8	16.5	2.8	0.2	0.4	0.2	1.1
	논산시	959	86.9	10.0	2.1	0.2	0.3	0.0	0.5
	계룡시	798	70.1	24.1	5.0	0.4	0.1	0.3	0.1
	당진시	1,059	77.1	16.9	2.5	1.2	0.1	0.1	2.0
	금산군	800	86.1	9.5	1.0	0.3	0.1	0.1	2.9
	부여군	800	88.5	6.5	1.4	0.4	0.6	0.0	2.6
	서천군	787	86.8	10.2	1.3	0.1	0.3	0.5	0.9
	청양군	781	78.6	12.2	2.3	0.8	0.0	0.0	6.1
	홍성군	819	81.1	12.0	1.2	0.1	0.2	0.0	5.4
	예산군	797	80.8	13.0	2.3	0.1	0.4	0.4	3.0
태안군	799	83.6	13.1	1.8	0.3	0.6	0.1	0.5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2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은 월평균 20만원 미만의 비중이 59.9%이며,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의 비중은 10.9%, 그리고 전혀 지출하지 않는 경우의 비중도 2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이 없는 경우의 비중은 대체로 연령대와 비례하는 반면, 학력과 소득에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표 3-8〉 가구당 월평균 지출비(오락/문화비)

(단위: %)

		사례수	20 만원미만	20~40 만원미만	40~60 만원미만	60~80 만원미만	80~100 만원미만	100 만원이상	없음
성별	전체	14,695	59.9	10.9	3.4	1.0	0.8	0.6	23.3
	남자	11,166	60.0	12.7	4.1	1.2	0.9	0.8	20.3
	여자	3,529	59.8	4.9	1.3	0.3	0.2	0.3	33.2
연령별	20대 이하	918	76.4	13.1	3.0	0.7	0.9	0.5	5.3
	30대	2,153	65.3	17.6	6.2	1.7	1.1	1.0	7.2
	40대	2,872	64.8	15.3	5.4	1.6	1.2	1.0	10.7
	50대	2,809	60.1	12.8	3.7	1.2	0.8	0.6	20.8
	60대 이상	5,943	50.5	3.5	0.8	0.3	0.3	0.3	44.2
학력별	초졸 이하	4,521	49.0	2.1	0.3	0.1	0.0	0.1	48.3
	중졸 이하	1,612	57.9	4.8	1.3	0.4	0.5	0.3	34.7
	고졸 이하	4,268	65.3	12.1	3.6	0.8	0.6	0.7	16.9
	대학 이상	4,294	64.1	18.7	6.4	2.1	1.6	1.2	6.0
소득별	100만원 미만	4,729	50.5	1.9	0.3	0.1	0.1	0.1	47.0
	100~200만 미만	3,196	65.1	6.4	1.8	0.5	0.4	0.3	25.6
	200~300만 미만	2,945	68.5	14.6	3.3	1.0	0.4	0.4	11.8
	300~400만 미만	1,873	64.6	18.6	5.0	1.9	1.6	0.9	7.4
	400~500만 미만	938	59.4	22.5	8.5	2.8	1.8	0.7	4.4
500만원 이상	1,014	47.5	24.2	13.4	3.4	3.1	4.0	4.4	
시군별	천안시	2,132	64.4	13.3	4.7	0.9	0.9	0.8	15.0
	공주시	877	60.4	10.9	3.2	0.6	0.6	0.5	23.8
	보령시	895	58.3	8.4	3.4	1.1	0.3	0.6	27.9
	아산시	1,455	61.6	12.2	4.3	1.0	0.8	0.8	19.3
	서산시	1,135	59.8	12.2	3.8	1.4	1.1	1.0	20.8
	논산시	903	67.3	9.6	2.1	1.4	0.3	0.3	18.8
	계룡시	797	64.6	16.8	6.9	2.3	1.5	1.0	6.9
	당진시	1,046	52.3	11.5	2.5	1.5	1.0	0.7	30.6
	금산군	798	50.0	5.9	1.0	0.1	0.1	0.3	42.6
	부여군	786	51.3	5.7	1.4	0.8	0.8	0.4	39.7
	서천군	692	61.6	6.1	1.6	0.7	0.6	0.7	28.8
	청양군	767	54.4	7.8	1.7	0.0	0.3	0.1	35.7
	홍성군	817	55.6	9.2	3.2	2.2	1.3	1.0	27.5
	예산군	796	44.8	6.8	2.3	0.6	0.5	0.3	44.7
태안군	799	65.2	8.0	1.0	0.3	0.4	0.3	24.9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2

⑥ 일자리/소득/소비 부문 정성지표의 측정 결과

일자리/소득/소비 부문 정성지표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장(일자리)내 만족도는 5.5점이며, 직장(일자리)내 인간관계 만족도는 5.9점, 업무량 스트레스 만족도는 5.2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소득/소비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나, 업무량 스트레스 만족도는 5.2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3-9〉 일자리/소득/소비 부문 만족도

구분		평균
일자리 소득 소비	직장(일자리) 만족도	5.5
	직장(일자리)내 인간관계 만족도	5.9
	업무량 스트레스 만족도	5.2

### (3) 교육

#### ① 교원 1인당 학생 수

충남 소재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에 19.3명으로 전국의 수치인 23.3명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점차 감소하여 2012년의 경우 충남이 14.6명으로 전국의 15.4명에 비해 단지 0.8명만큼만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그림 3-17〉 연도별 교원1인당 학생수(명)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그림 3-18〉 지역별 교원1인당 학생수(명)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전남이 13.1명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은 강원(13.3명), 전북(13.7명), 경북(13.9명), 충남(14.6명), 경남(15.0명) 등의 순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6.5명으로 조사된다. 반면, 2000년 대비 2012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모든 지역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인천이 동기간 26.9명에서 15.6명으로 11.3명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충남은 19.3명에서 14.6명으로 단지 4.7명만큼만 감소하여 전국의 동기간 감소분인 7.9명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작음을 볼 수 있다.

② 교육 부문 정성평가 결과

교육 부문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전공 또는 학업수준 만족도는 5.8점, 자녀의 교우관계 만족도는 6.1점, 자녀와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는 5.7점, 사교육비 및 사교육 효과 만족도는 4.7점, 자녀의 학습내용 만족도는 5.3점, 자녀의 학습결과 만족도는 5.3점으로 나타났다.

〈표 3-10〉 교육 부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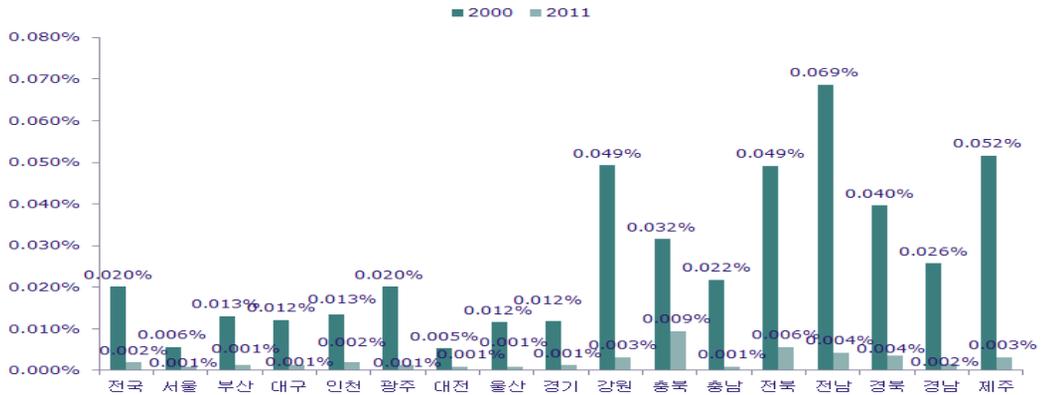
구분		평균
교육	전공 또는 학업수준 만족도	5.8
	자녀의 교우관계 만족도	6.1
	자녀와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5.7
	사교육비 및 사교육 효과 만족도	4.7
	자녀의 학습내용 만족도	5.3
	자녀의 학습결과 만족도	5.3

#### (4) 가족 및 공동체

##### ① 소년소녀가장 비율

지역별 소년소녀가장 비율은 충남이 2011년에 0.001%를 기록하였으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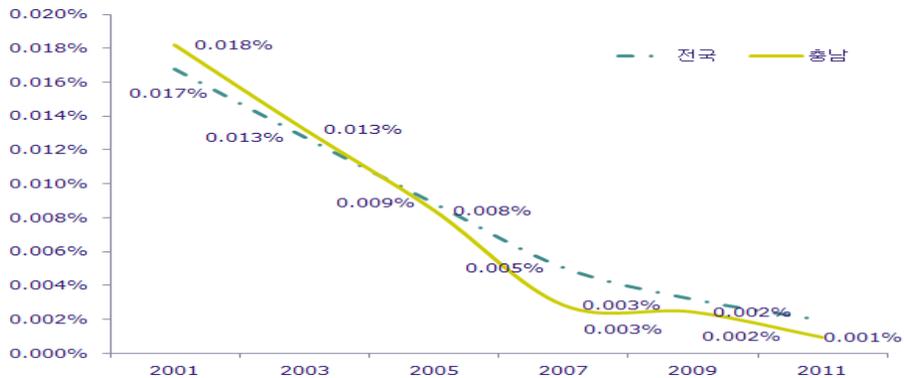
〈그림 3-19〉 지역별 소년소녀가장 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현황

연도별 소년소녀가장 비율은 전국이 2001년 0.017%, 2011년 0.002%으로 감소하였으며, 충남의 소년소녀가장 비율도 2001년 0.018%, 2011년 0.001%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0〉 연도별 소년소녀가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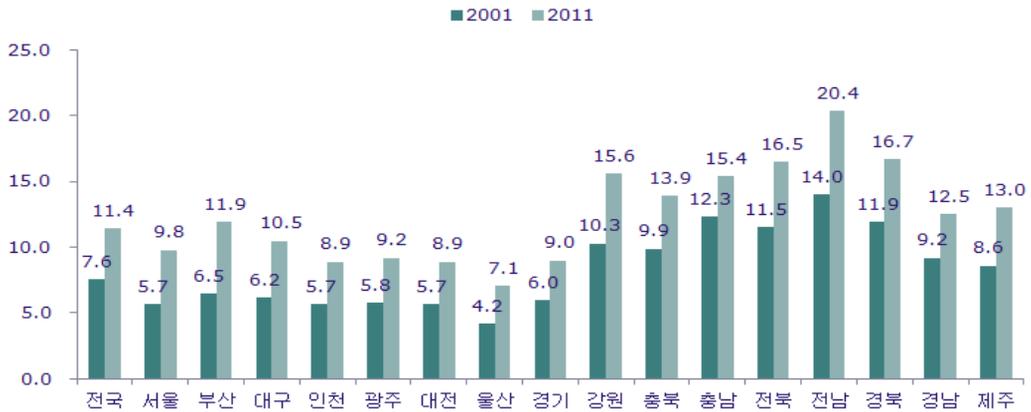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현황

## ② 노인인구비율

노인인구비율에 있어 충남은 2011년 15.4%으로 전남, 전북, 강원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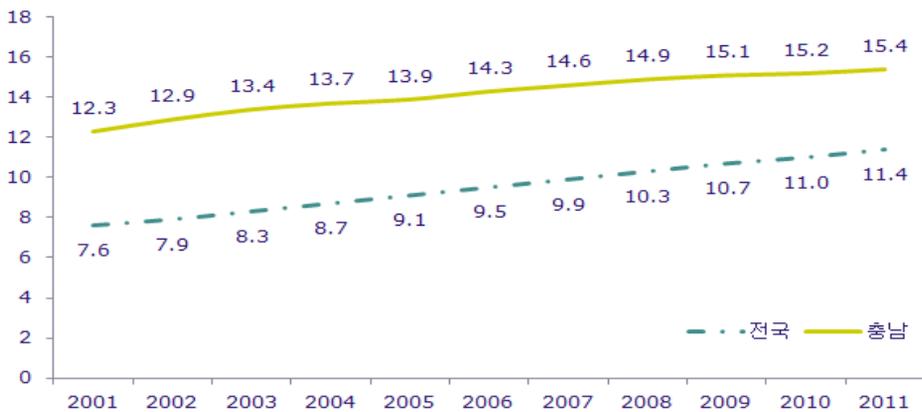
〈그림 3-21〉 지역별 노인인구비율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0년대 연도별 노인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은 2001년 7.6%, 2011년 11.4%으로 증가하였으며, 충남도 2001년 12.3%, 2011년 15.4%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그림 3-22〉 연도별 노인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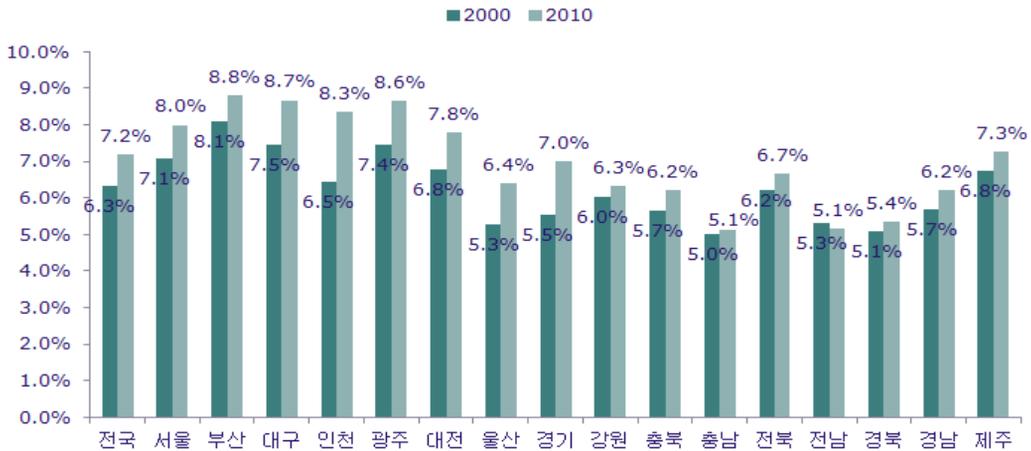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③ 모자세대 비율

모자세대비율에 있어 충남은 2010년 5.1%으로 전남의 비율과 같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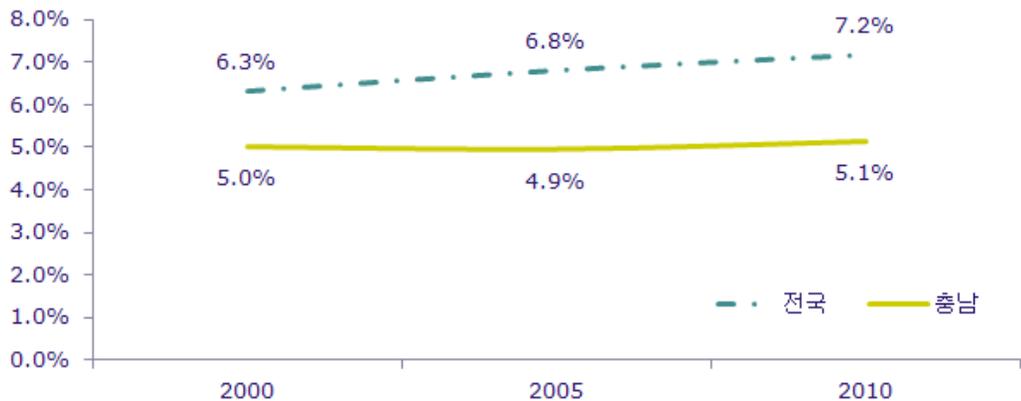
〈그림 3-23〉 지역별 모자세대 비율



출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시계열 변화를 보면 전국 모자세대 비율은 2000년 6.3%에서 2010년 7.2%으로 점차 증가 하였으나 충남은 2000년 5.0%, 2010년 5.1%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4〉 연도별 모자세대 비율



출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④ 부자세대 비율

부자세대 비율은 2010년 충남이 1.5%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00년 1.2%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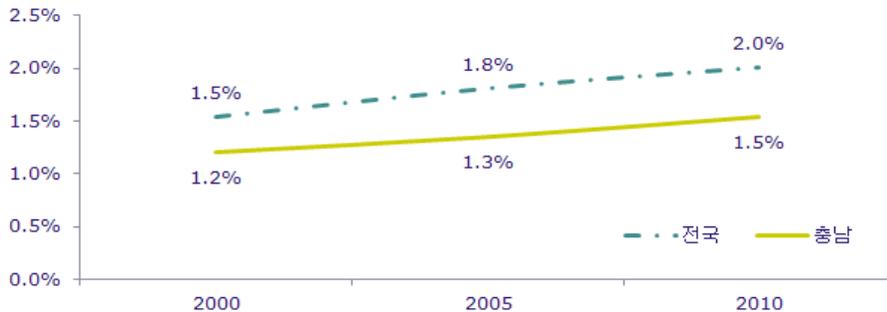
〈그림 3-25〉 지역별 부자세대 비율



출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시계열 변화를 보면, 전국 부자세대 비율은 2000년 1.5%, 2005년 1.8%, 2010년 2.0%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충남 부자세대 가구비율 역시 2000년 1.2%, 2005년 1.3%, 2010년 1.5%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 3-26〉 연도별 부자세대 비율



출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⑤ 자살률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sup>2)</sup>은 충남이 2011년 44.9명으로 전국 31.7명에 비해 높으며, 강원에 비해 낮으며 강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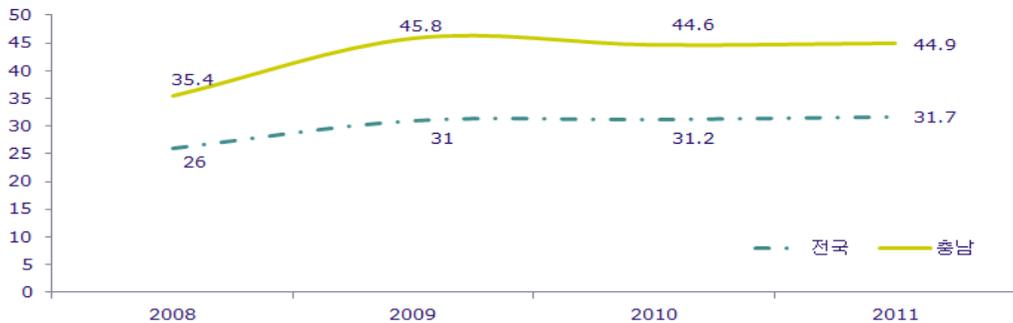
〈그림 3-27〉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출처 : 통계청 조사기획과

2000년대 연도별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충남은 2008년 35.4명, 2011년 44.9명으로 자살자 수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전국도 2008년 26명, 2011년 31.7명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된다.

〈그림 3-28〉 연도별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출처 : 통계청 조사기획과

2)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 (자살자수/연앙인구)\*100

⑥ 가족 및 공동체 부문 정성지표의 측정 결과

가족 및 공동체 부문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충분성은 5.0점, 가족 관계 만족도 6.4점, 가족 간 갈등형성 3.7점, 가족 간 폭력 2.8점, 직장업무의 가족관계 부정적 영향 4.4점, 가족관계의 직장업무 부정적 영향 4.0점,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 유지 6.4점, 지역 사회 소속감 5.7점, 사회 신뢰수준 5.6점으로 나타났다.

〈표 3-11〉 가족 및 공동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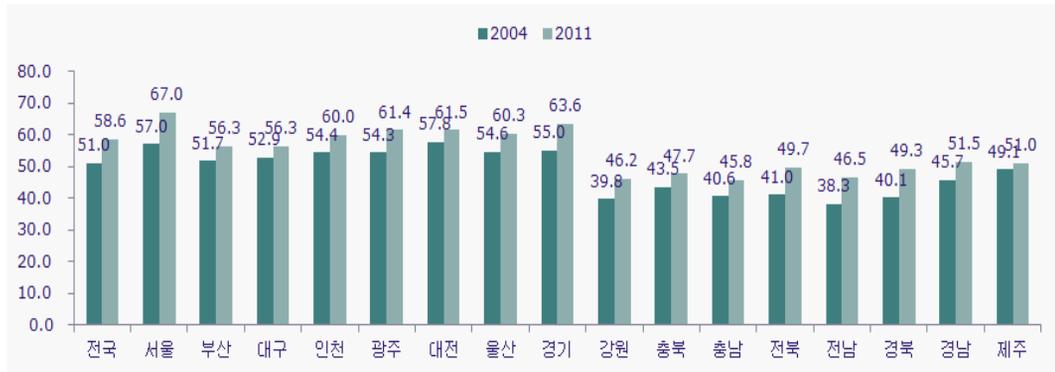
구분		평균
가족 및 공동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충분성	5.0
	가족관계 만족도	6.4
	가족 간 갈등형성 수준	3.7
	가족 간 폭력 경험	2.8
	직장업무의 가족관계 부정적 영향	4.4
	가족관계의 직장업무 부정적 영향	4.0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 유지	6.4
	지역사회 소속감	5.7
	사회 신뢰수준	5.6

## (5) 문화 및 여가

### 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에 있어서 충남은 2011년 45.8%으로 전국 58.6%에 비해 낮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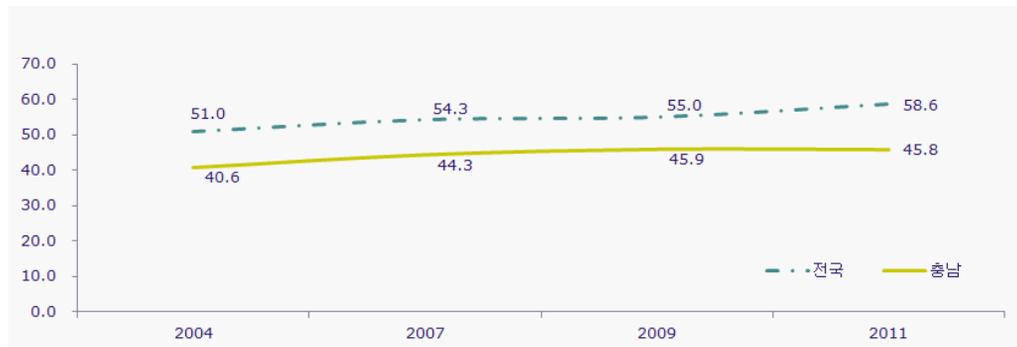
〈그림 3-29〉 지역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2000년대 연도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를 살펴보면, 충남은 2004년 40.6%, 2011년 45.8%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전국에 비해 항상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

〈그림 3-30〉 연도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② 레저시설 이용여부

레저시설 이용여부에 있어서 충남은 2011년 62.3%로 전국 65.8%에 비해 낮으며 강원, 충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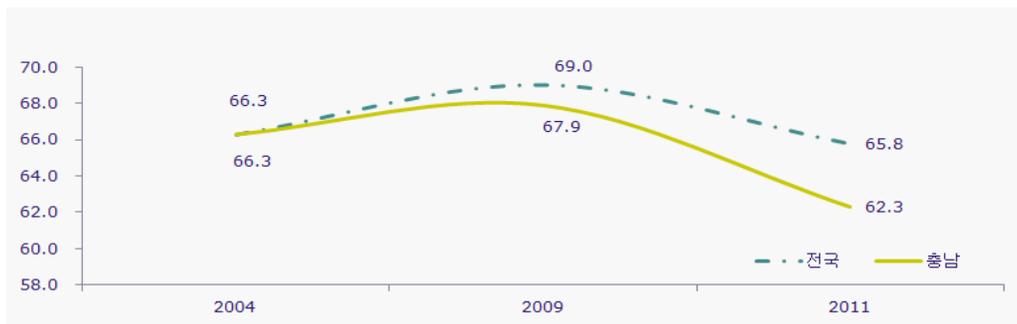
〈그림 3-31〉 지역별 레저시설 이용여부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2000년대 연도별 레저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충남은 2004년 66.3%, 2011년 62.3%로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국과 충남 모두 2004년에 비해 2009년에는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11년도에 다시 감소하였다.

〈그림 3-32〉 연도별 레저시설 이용여부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③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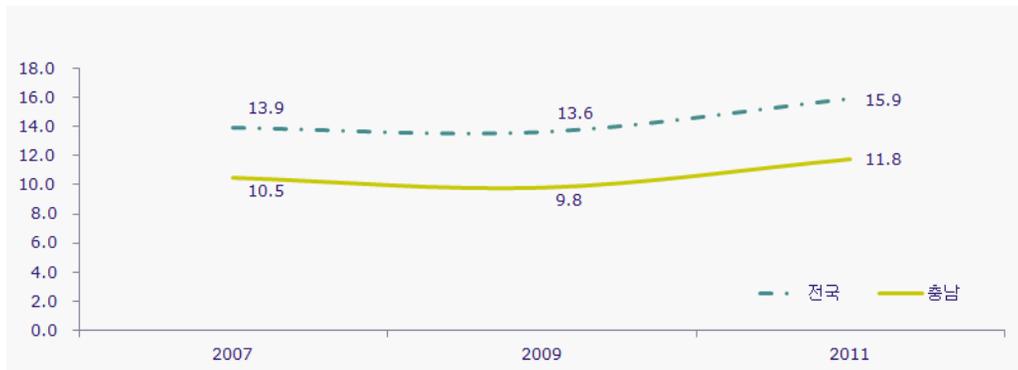
〈그림 3-33〉 지역별 해외여행 여부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2000년대 연도별 해외여행여부를 살펴보면, 충남은 전국에 비해 항상 낮으며 2007년 10.5%, 2011년 11.8%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34〉 연도별 해외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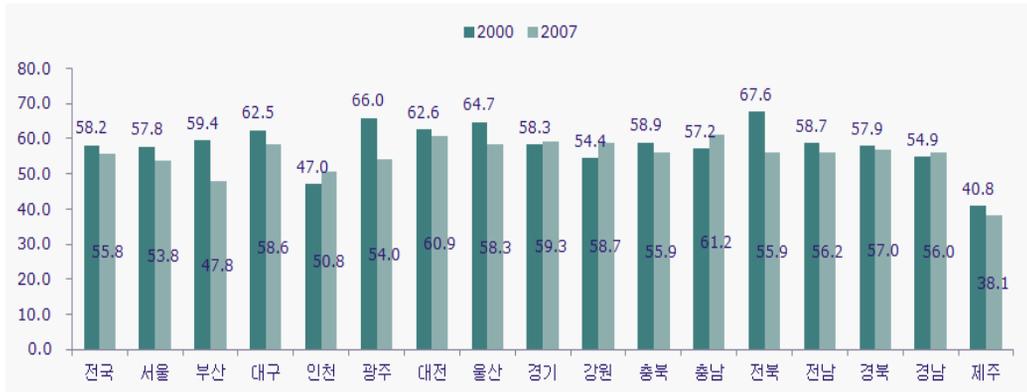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④ 국내관광여행 여부

국내관광여행에 있어 충남은 2007년 61.2%으로 전국 55.8%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대전 60.9%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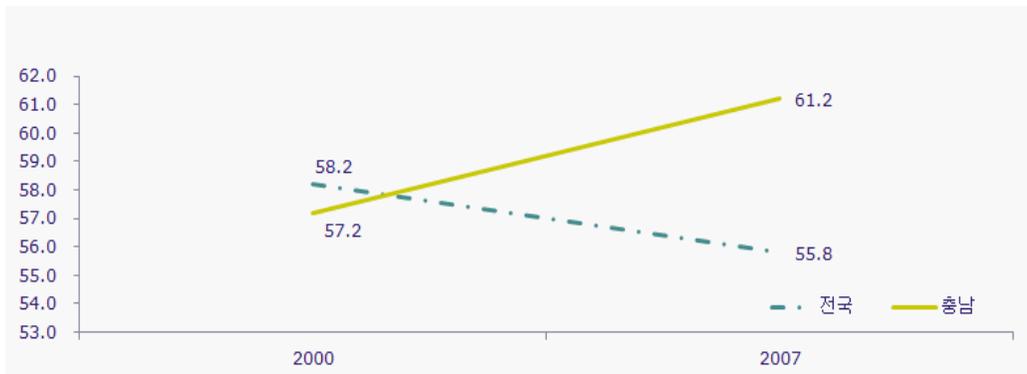
〈그림 3-35〉 지역별 국내관광여행 여부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2000년대 연도별 국내관광여행 여부는 2000년 충남 57.2%, 전국 58.2%으로 전국이 다소 높았지만 2007년 충남 61.2%, 전국 55.8%으로 충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그림 3-36〉 연도별 국내관광여행 여부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⑤ 문화 및 여가 부문 정성평가 결과

문화 및 여가 부문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의 문화자원 인지도는 5.1점, 지역 문화자원 활용도는 4.9점, 지역자원(시설)의 변화 만족도는 5.1점,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는 5.2점으로 나타났다. 지역 문화자원 활용도는 4.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표 3-12〉 문화 및 여가 부문 만족도

구분		평균
문화 및 여가	지역의 문화자원 인지도	5.1
	지역 문화자원 활용도	4.9
	지역자원(시설)의 변화 만족도	5.1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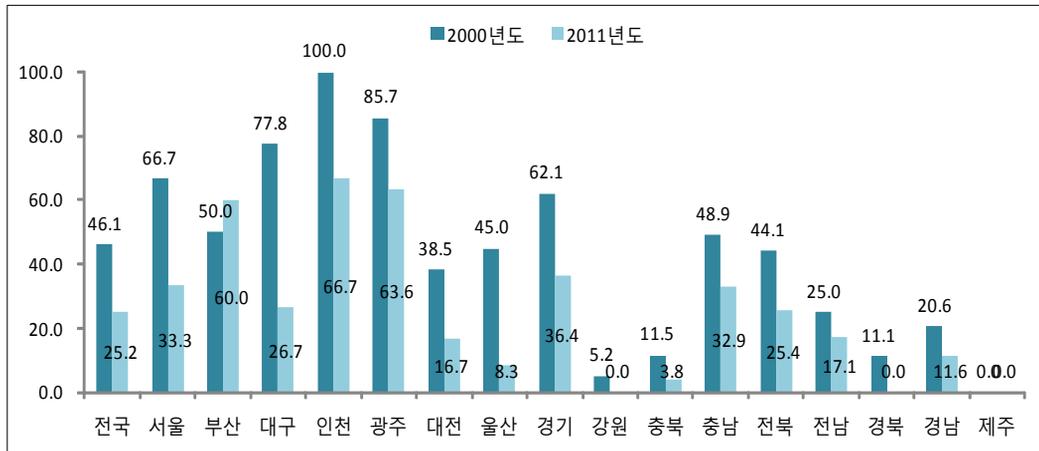
## (6) 환경

### ① 하천수질

환경부 하천 일반측정망 952개소를 대상으로 2000년과 2011년 광역자치단체간 하천 BOD농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각 하천 일반측정망에서 측정한 연평균 BOD농도를 생활환경기준 Ia, Ib, II, III, IV, V, VI등급으로 구분한 다음, 연평균 BOD농도가 III~VI등급에 해당되는 비율을 산정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그림 3-39>에 나타내었다.

전국 평균 III(보통)등급 이하의 수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46.1%에서 2011년 25.2%로 감소하여 수질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하천 일반측정망 가운데 하천 BOD수질이 III등급이하인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인천, 광주, 대구, 서울, 경기, 부산 순이었으며, 충남은 7번째로 48.9%로 나타났다. 반면, 2011년에는 전국 평균이 25.2%로 상당한 수준의 수질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충남은 32.9%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인천, 광주, 부산, 경기, 서울 다음으로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7> 하천수질(BOD)



산출방식 : 환경부 수질(일반측정망) 하천수질 연평균 유기물(BOD)농도의 III~VI등급 비율, 높을수록 수질 악화 (값 없음=측정망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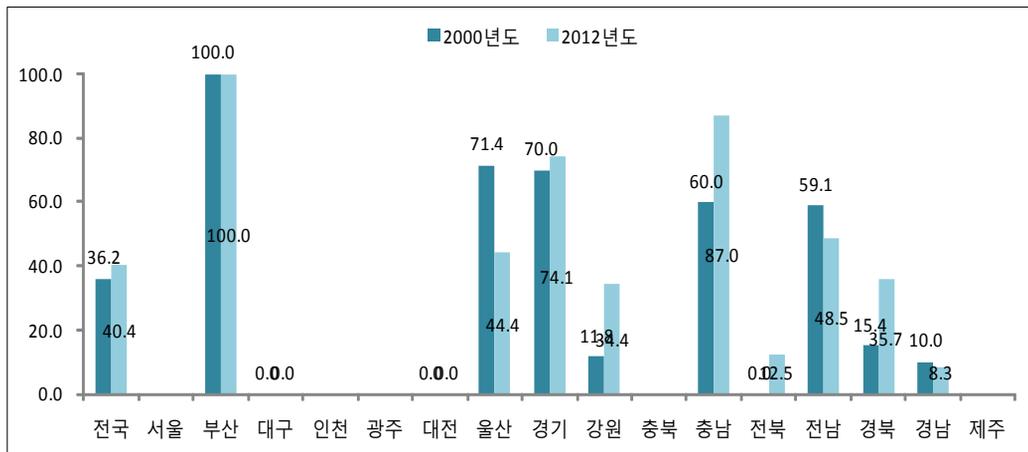
출처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 ② 호소수질

호소 수질측정망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제주를 제외한 11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천수질과 동일한 방법으로 2000년과 2011년 광역자치단체간 호소 COD 농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전국 평균 III(보통)등급 이하의 수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6.2%에서 2011년 33.1%로 증가하여 다소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부산, 울산, 경기, 충남의 순으로 4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측정망의 60.0% 이상에서 III등급이하의 수질을 나타냈다. 2011년 전국 평균은 40.4%로 증가하였으며, 충남은 87.0%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수질 등급이 낮은 광역자치단체로 나타났다.

〈그림 3-38〉 호소수질(C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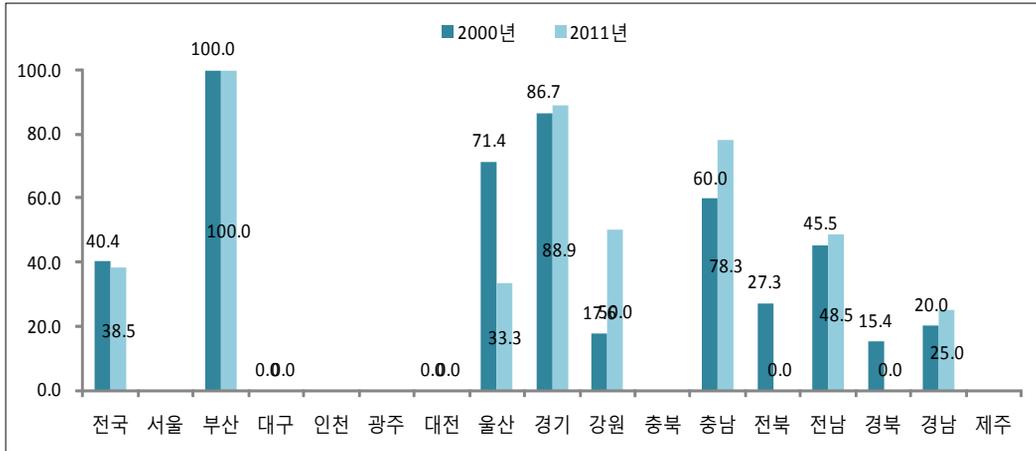


산출방식 : 환경부 수질(일반측정망) 호소수질 연평균 유기물(COD)농도의 III~VI등급 비율, 높을수록 수질 악화 (값 없음=측정망 없음)

출처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2000년과 2011년 호소 T-P농도변화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 평가하였다. 전국 평균 III(보통) 등급 이하의 수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40.4%에서 2011년 38.5%로 감소하여 수질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부산, 경기, 울산, 충남의 순으로 4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측정망의 60.0% 이상에서 III등급이하의 수질을 나타냈다. 2011년 전국평균은 38.5%로 다소 개선되었으며, 충남은 78.3%로 부산,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수질 등급이 낮은 광역자치단체로 나타났다.

〈그림 3-39〉 호소수질(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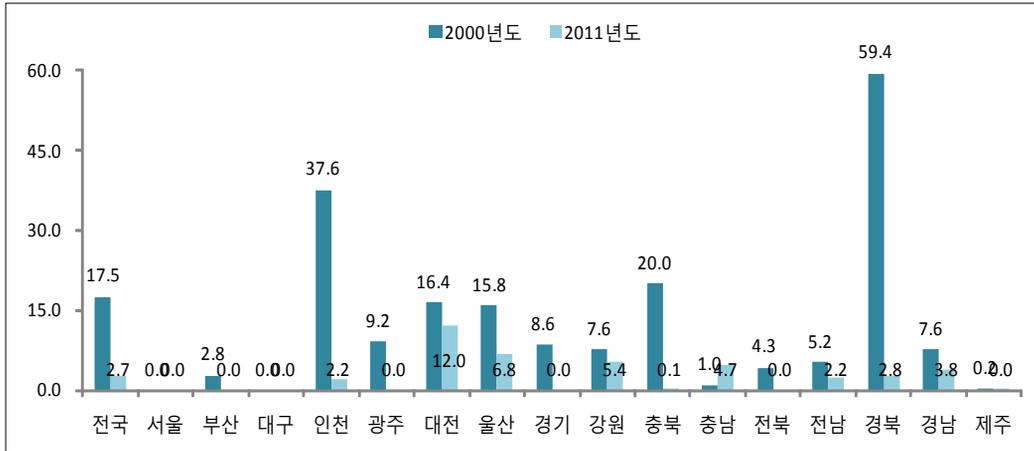
산출방식 : 환경부 수질(일반측정망) 호소수질 연평균 T-P농도의 III~VI등급 비율, 높을수록 수질 악화  
(값 없음=측정망 없음)

출처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 ③ 생활폐기물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과 2011년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율을 산정하였다. 2000년도에 전국 평균은 17.5%로 경북, 인천, 충북, 대전, 울산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1.0%로 상당히 낮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전국 평균이 2.7%로 전국적으로 폐기물관리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대전 12%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10%미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은 2000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4.7%로 나타났다.

〈그림 3-40〉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율



산출방식 : (생활폐기물 처리구역/행정구역)\*100, 높을수록 폐기물 미처리 지역이 많음  
출처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2001, 2012)

#### ④ 환경보건 관련 지표

환경부에서는 환경유해인자의 인체노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2009년부터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환경보건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나, 대부분 혈중 중금속 수준에 대한 정보만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로 구분하고 구축하고 있어 전국단위 시·도별 시계열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통해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천식 및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나, 전국단위 시·도별 시계열 비교분석이 불가능하여 환경보건과 관련된 지표를 선정 및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⑤ 환경 부문 정성평가 결과

환경 부문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수질 만족도는 5.5점, 주변 청결상태 만족도는 5.3점,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은 5.1점으로 나타났다.

〈표 3-13〉 환경 부문 만족도

구분		평균
환경	수질 만족도	5.5
	주변 청결상태 만족도	5.3
	건강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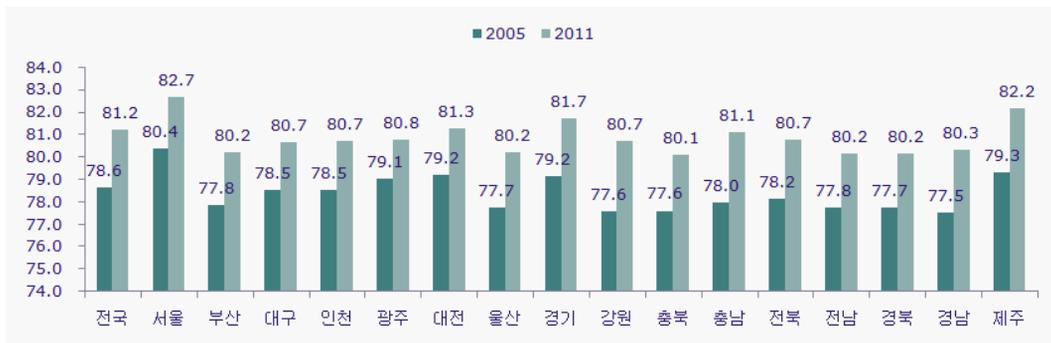
## (7) 건강/보건

### ① 출생시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수명은 연령별·성별 사망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대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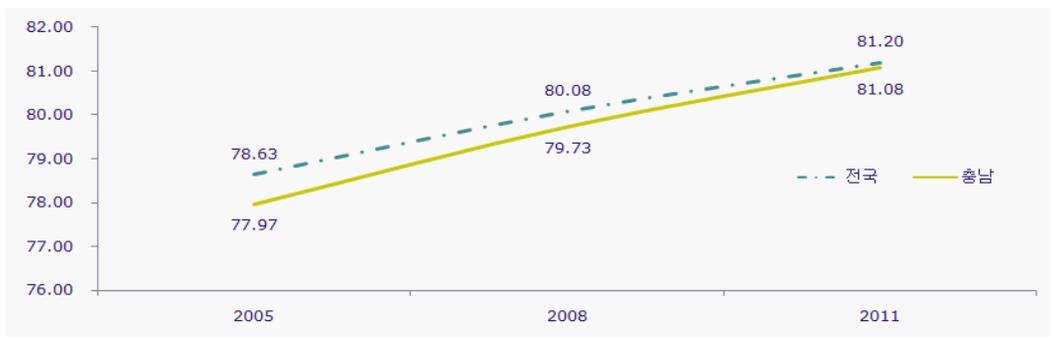
2011년 충남의 출생시 기대수명은 81.1세로, 이는 전국의 수치(81.2세)와 유사하다. 하지만, 2005년의 수치는 충남이 78.0세인 반면 전국은 78.6세로 2005~2011년의 기간동안 출생시 기대수명의 증가는 충남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볼 수 있다. 2011년 기준 충남에 비해 출생시 기대수명이 높은 지역은 서울(82.7세), 제주(82.2세), 경기(81.7세), 대전(81.3세)으로 조사된다.

〈그림 3-41〉 지역별 출생시 기대수명(세)



출처 : KOSIS

〈그림 3-42〉 연도별 출생시 기대수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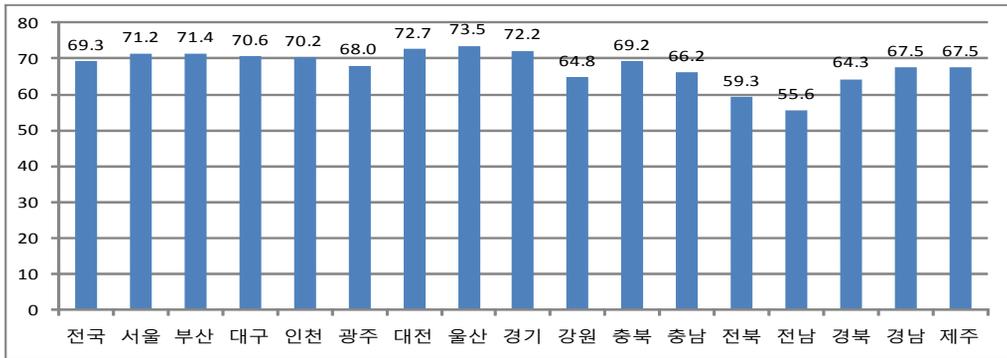


출처 : KOSIS

② 음주 및 흡연율

충남의 2012년 음주율은 66.2%로 전국평균인 69.3%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보다 도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60.7% 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음주율의 경우 1년 이내 음주 경험을 의미하고 있어 음주량에 대한 조사가 보완 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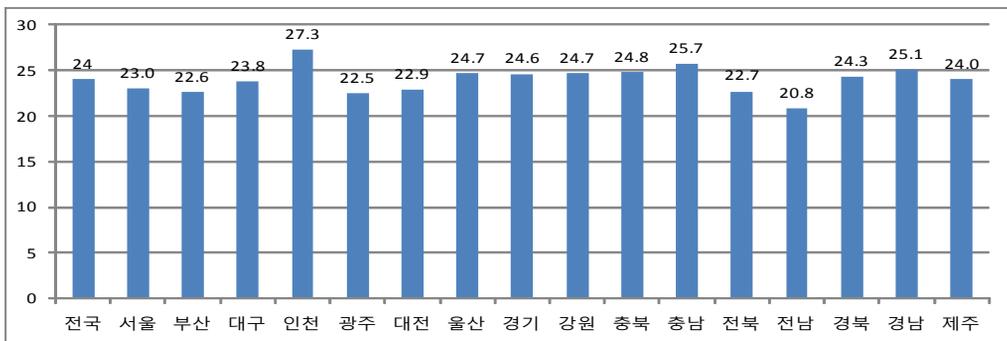
〈그림 3-43〉 지역별 음주율



출처 : KOSIS

충남의 흡연율은 25.7%로 전국평균 24.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경우 타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충남의 2010년 20.4%보다는 상당수 높게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4〉 지역별 흡연율



출처 : KOSIS

### ③ 인구천명당 병상수

인구 1천명당 지역 내 병상수에서 충남은 2011년에 11.6개를 나타내 전국의 11.4개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충남의 2011년 수치는 2006년 수치(19.0개/천명)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임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기간 내 전국의 수치가 10.5개/천명(2006년)에서 11.4개/천명(2011년)으로 다소 상승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림 3-45〉 인구천명당 병상수(개/천명)



출처 : KOSIS

2011년 기준 충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는 곳은 제주(7.8개/천명), 서울(8.0개/천명), 경기(9.1개/천명), 인천(9.8개/천명), 울산(10.8개/천명)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충남의 병상수에 의한 의료시설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도내 시군별로는 공주시, 부여군, 금산군 등의 순으로 인구 1천명당 병상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계룡시, 당진시, 청양군 등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표 3-14〉 도내 시군별 인구천명당 병상수

(단위: 개/천명)

	2006	2011
천안시	8.4	10.4
공주시	15.9	27.4
보령시	10.9	12.2
아산시	9.3	8.5
서산시	8.5	6.6
논산시	14.5	18.0
계룡시	5.7	4.0
금산군	13.6	18.4
연기군	7.8	9.1
부여군	14.9	19.6
서천군	14.2	14.4
청양군	9.9	5.6
홍성군	12.0	13.2
예산군	7.2	9.4
태안군	8.0	8.1
당진군	7.0	4.6

출처 : KOSIS

③ 건강 및 보건 부문 정성평가 결과

건강 부문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수준은 5.5점, 건강상태 수준은 5.9점,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는 5.4점, 의료서비스 접근성 만족도는 5.2점으로 나타났다.

〈표 3-15〉 건강 부문 만족도

구분		평균
건강 및 보건	스트레스 수준	5.5
	건강상태 수준	5.9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	5.4
	의료서비스 접근성 만족도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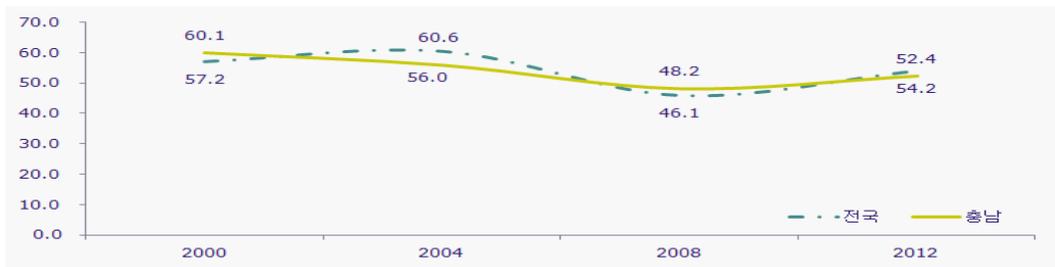
## (8) 주민참여

### ① 투표율

투표율은 유권자 수 대비 투표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참여를 측정하는 가장 근접한 지표이다. 또한, 주민들이 행정과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참여행위라 할 수 있다.

연도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2년 충남의 경우 54.2%로 전국 평균인 52.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과 2004년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으나 지난 2008년 선거의 투표율인 46.1% 보다는 상당수 높아졌다. 지역적으로도 큰 차이는 없었으나 2012년 세종시가 59.2%로 가장 높았고 50% 이하로 내려간 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6〉 연도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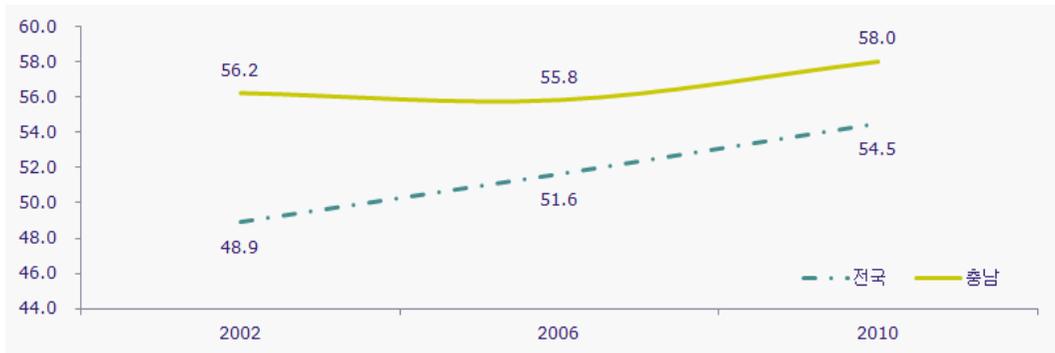
〈그림 3-47〉 지역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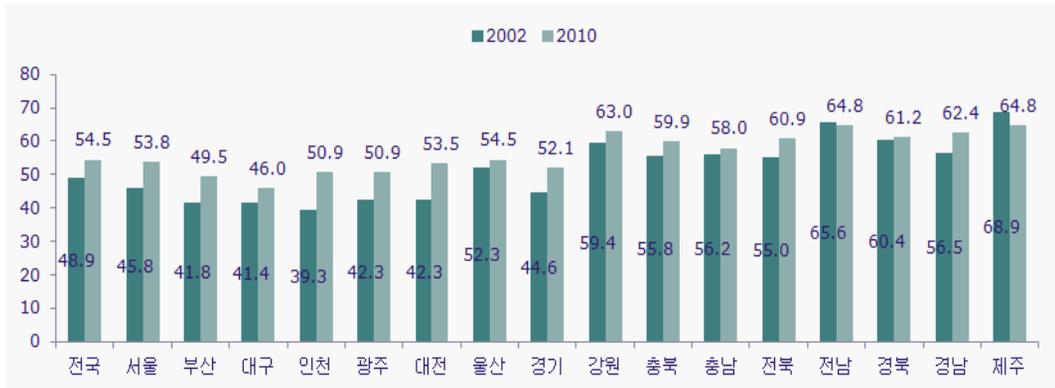
연도별 지방선거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0년 충남의 경우 58.0%로 전국 평균인 54.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 비하여 다소 높아졌으며 지역적으로는 2010년 전남이 64.8%로 가장 높았고 50% 이하로 내려간 자치단체는 부산과 대구로 나타났다.

〈그림 3-48〉 연도별 지방선거 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그림 3-49〉 지역별 지방선거 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연도별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2년 충남의 경우 72.9%로 전국 평균인 75.8%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비하여 다소 높아졌으며 지역적으로는 2012년 광주가 80.4%로 가장 높았다.

〈그림 3-50〉 연도별 대통령선거 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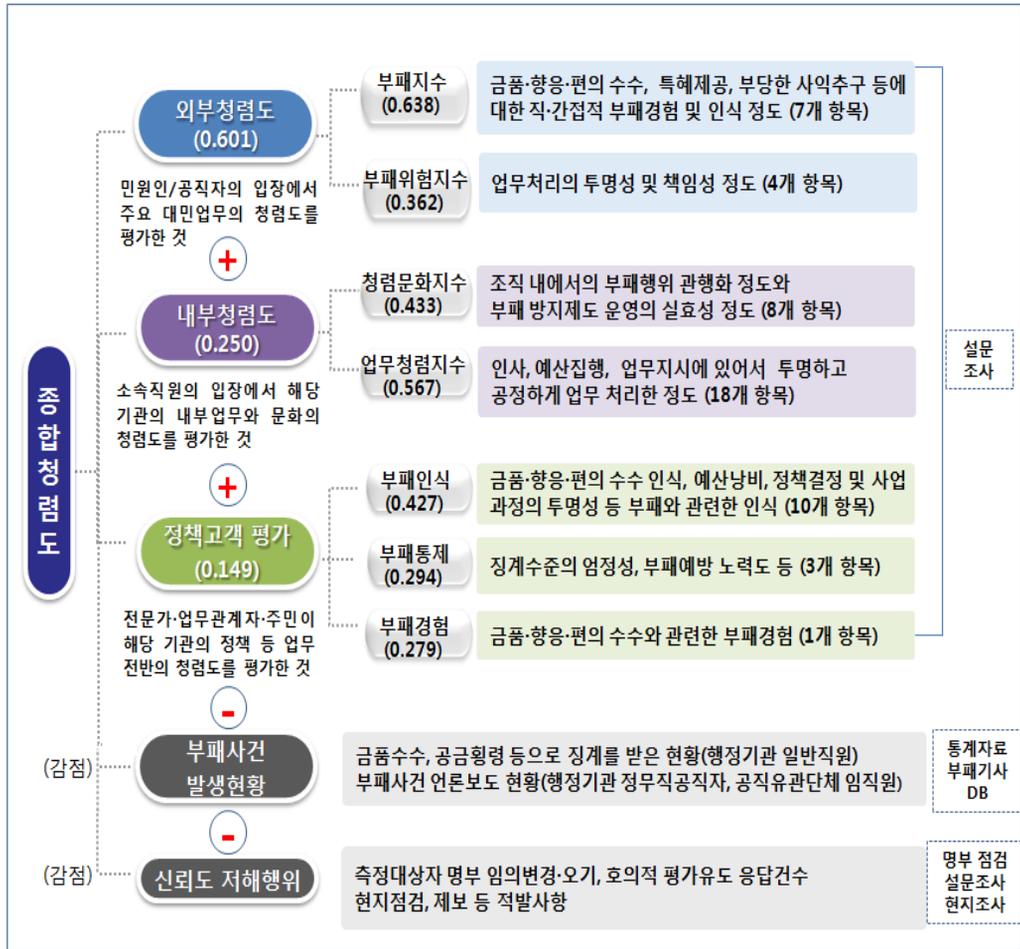
〈그림 3-51〉 지역별 대통령선거 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 ② 청렴도

청렴도란 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외부청렴도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이며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또한 정책고객평가는 해당기관의 관련 학회, 출입기자, 의원보좌관, 시민단체·산하기관·직능단체 관계자 등에 의한 평가이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며 공공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으로 국가 청렴도의 제고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충남의 종합청렴도는 7.36으로 전년대비 -1.03으로 조금 낮아졌으나 대전, 대구, 경기도, 경북, 전북과 함께 2등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청렴도의 경우 8.11점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순위였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책고객평가에 있어서는 5.93으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표 3-16〉 2012년도 전국자치단체 청렴도

(’12년도 점수, ’11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16)	외부청렴도(16)	내부청렴도(16)	정책고객 평가(16)
	평균 7.14, 표준편차 0.32	평균 7.59, 표준편차 0.44	평균 7.73, 표준편차 0.43	평균 6.30, 표준편차 0.21
1 등급	(7.62점 이상)	경기도(8.36, -0.67)  (8.25점 이상)	인천광역시(8.4, 0.10)  (8.38점 이상)	인천광역시(6.67, - ) 대전광역시(6.64, - )  (6.62점 이상)
2 등급	대전광역시(7.61, -1.02) 대구광역시(7.59, -0.82) 경기도(7.38, -1.35) 충청남도(7.36, -1.03) 경상북도(7.35, -1.14) 전라북도(7.31, -1.36)  (7.30~7.61점)	충청남도(8.11, -0.71) 경상북도(8.09, -0.70) 대구광역시(7.93, -0.86) 울산광역시(7.85, -0.73) 대전광역시(7.82, -1.00)  (7.81~8.24점)	충청북도(8.18, -0.16) 부산광역시(8.16, -0.10) 대구광역시(8.07, 0.15) 울산광역시(8.04, -0.22) 대전광역시(8.03, -0.23)  (7.95~8.37점)	경상북도(6.49, - ) 전라북도(6.45, - ) 광주광역시(6.44, - )  (6.41~6.61점)
3 등급	인천광역시(7.27, -1.22) 광주광역시(7.21, -1.35) 울산광역시(7.21, -1.12) 충청북도(7.06, -1.43) 강원도(7.00, -1.55)  (6.98~7.29점)	인천광역시(7.72, -1.06) 전라북도(7.62, -1.42) 광주광역시(7.53, -1.20) 서울특별시(7.53, -1.59) 부산광역시(7.44, -0.96) 전라남도(7.40, -1.05) 충청북도(7.37, -1.32)  (7.37~7.80점)	전라북도(7.91, -0.37) 강원도(7.82, -0.48) 광주광역시(7.78, -0.58) 경기도(7.64, -0.89) 서울특별시(7.61, -0.83) 경상남도(7.61, -0.69)  (7.52~7.94점)	충청북도(6.35, - ) 경상남도(6.35, - ) 전라남도(6.35, - ) 부산광역시(6.32, - ) 울산광역시(6.32, - )  (6.20~6.40점)
4 등급	서울특별시(6.96, -1.40) 부산광역시(6.96, -1.14) 전라남도(6.90, -1.42) 경상남도(6.74, -1.59)  (6.66~6.97점)	강원도(7.31, -1.42)     (6.93~7.36점)	충청남도(7.30, -0.50) 경상북도(7.10, -1.13)    (7.09~7.51점)	서울특별시(6.18, - ) 강원도(6.15, - ) 대구광역시(6.10, - ) 경기도(6.07, - ) 제주특별자치도(6.04, - )  (5.99~6.19점)
5 등급	제주특별자치도(6.29, -2.21)    (6.66점 미만)	경상남도(6.88, -1.53) 제주특별자치도(6.54, -2.32)   (6.93점 미만)	전라남도(7.00, -1.06) 제주특별자치도(6.97, -0.99)   (7.09점 미만)	충청남도(5.93, - )    (5.99점 미만)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 ③ 정보공개율

행정정보공개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중 비공개를 제외하고 전부공개,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의 백분율로서 전체 청구건수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 등을 제외한 실제 처리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방법을 유형화한 것으로, ‘직접출석/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공개사유별 현황은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건수 중 비공개 사유별로 유형화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8호’의 사유로 분류된다.

정보공개 결정기간별 현황은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중 공개여부 결정에 소요된 현황을 유형화한 것으로, 현재는 당일(즉시)/10일이내/20일이내/20일 초과’로 분류되며, 2004년~2011년까지는 ‘당일(즉시)/3일이내/5일이내/10일이내/20일이내/20일 초과’로 분류되고, 2003년 이전에는 ‘당일/3일이내/7일이내/10일이내/15일이내/30일이내/30일 초과’로 분류된다.

충남의 정보공개율은 94.2%로 타 자치단체 대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은 비공개 결정의 사유, 청구방법,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기간과 연계되어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질적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학술연구 등 각종 통계치로 활용될 수 있다.

충청남도의 2012년 정보공개율은 97.2%로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94.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7〉 2012년도 전국자치단체 정보공개율

기 관 명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소 계(시·도)	206,834	183,432	17,512	5,890	97.2
서울특별시	37,887	33,544	3,026	1,317	96.5
부산광역시	11,149	10,219	708	222	98.0
대구광역시	6,713	6,112	487	114	98.3
인천광역시	11,157	9,312	1,566	279	97.5
광주광역시	3,656	3,216	364	76	97.9
대전광역시	4,616	3,997	530	89	98.1
울산광역시	3,616	3,275	230	111	96.9
경기도	47,177	40,925	4,778	1,474	96.9
강원도	10,906	9,895	725	286	97.4
충청북도	8,017	7,308	485	224	97.2
충청남도	11,129	9,837	978	314	97.2
전라북도	8,831	7,987	586	258	97.1
전라남도	12,788	11,642	817	329	97.4
경상북도	14,059	12,680	939	440	96.9
경상남도	12,643	11,470	881	292	97.7
제주특별자치도	1,959	1,549	360	50	97.4

출처 : 안전행정부 201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④ 주민참여 부문 정성평가 결과

주민참여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충남도정 운영 만족도는 4.9점, 충남도정 주요정책 인지도는 4.6점, 도정참여 영향도는 4.7점, 충남도정 신뢰수준은 4.8점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 부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주민참여 부문 만족도

구분		평균
주민 참여	충남도정 운영 만족도	4.9
	충남도정 주요정책 인지도	4.6
	도정참여 영향도	4.7
	충남도정 신뢰수준	4.8

### (9)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부분의 만족도에 있어 전반적인 삶 만족도는 6.0점,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 6.2점, 부정적 정서 느끼는 정도 4.7점, 현재보다 더 행복해 질 것이라는 생각 6.5점, 외향적 성격 6.0점으로 나타났다.

〈표 3-19〉 주관적 웰빙 부문 만족도

구분		평균
주관적 웰빙	전반적인 삶 만족도	6.0
	긍정적 정서 느끼는 정도	6.2
	부정적 정서 느끼는 정도	4.7
	현재보다 더 행복해 질 것이라는 정도	6.5
	외향적 성격	6.0

## (10) 소결

### ① 충남 행복지표 측정결과 개관

충남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들에 대한 수치의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주거/교통영역에서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국 수치와 유사하며,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범죄발생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1인당 공원면적의 경우 충남은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한다. 주거/교통영역에서 주택전세가격지수와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범죄발생건수 등은 전년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성평가에서도 보통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히 교통사고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소득/소비영역에서 충남의 고용률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의 수치에 비해 높으나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최근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충남의 여성실업률 또한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한 세부지표에서 충남은 전국에 비해 여건이 나은 편이다. 고용률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비정규직 비중 등은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비농가실업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실질임금 총액과 성별임금 격차 등의 지표에 대하여는 도 수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리가 필요하다.

가족/공동체영역에서 부자세대 비율, 모자세대 비율, 독거노인비율이나 소년소녀가장 비율에서 충남은 대체로 전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지표별로는 한부모 비율이 전년대비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 비율도 많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시 되며 또한 자살률에 있어서도 수치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만족도에서 타 영역에 비하여 가족/공동체영역은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영역의 측정은 통계작성에 있어 어려움과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작성되고 있는 통계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청과의 협조도 필요하다. 조사 가능한 지표를 살펴보면 충남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으며 그 격차가 최근에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시되는 지표이다. 교육영역의 세부지표 가운데 객관적 지표는 7개가 제시되었으나, 대부분 충남에 대한 수치를 얻는 것이 용이치 않아 교육에 대한 충

남의 객관적 여건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불만족하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여가영역의 세부지표들에 대해 충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즉, 열악한 여건 혹은 제한적 기회-를 나타낸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해외 여행의 경험 역시 전국 평균을 하회한다. 또한, 레저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전국의 추세에 비해 충남은 최근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국내관광 여행 여부, 해외여행 경험 여부 등은 전년대비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 도민이 타 지역 사람들에 비해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가 낮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문화/여가영역에 대한 도민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낮음을 고려할 때 이는 도내 문화/여가시설이나 공연의 부족과 같은 여건의 상대적 열악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역에서 하천수질이나 호소수질에 대한 충남의 수치가 전년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전국의 수치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공공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건강/보건영역에서 충남의 출생시 기대수명은 전국 평균에 비해 대체로 낮으나 최근에는 전국의 수치를 근접하였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에서 충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나 2006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음주율과 흡연율도 전년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민의 건강/보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주민참여영역에서 투표율은 지방선거와 이외의 선거 간에 충남의 상대적 수치가 상이하다. 지방선거에서 충남의 투표율은 전국의 수치를 상회하지만, 지방선거 이외의 선거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도민의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국가 전체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높음을 나타낸다. 충남도의 정보공개율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중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회에 비하여 투표율과 정보공개율은 향상되고 있으나 청렴도에서는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정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인식 등이 다른 지표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② 대체지표의 필요

세부지표들에 대한 실제 측정의 결과를 보면, 주거/교통, 일자리/소득/소비, 문화/여가, 환경영역에서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측정이 대체로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반면, 교육, 가족/공동체, 건강/보건영역의 경우에는 다수의 세부지표가 충남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아 해

당 세부지표들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세부지표 개발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영역별로 대체지표가 요구되는 세부지표들을 살펴보면, 일자리/소득/소비영역의 비농가 실업률, 성별 임금격차, 가족/공동체영역의 가까운 친구수, 사회단체 참여율, 교육영역의 영유아 교육 접근성, 고등교육 접근성, 평생교육 접근성, 1인당 장서수, 성적, 학습시간, 환경영역의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률, 건강/보건영역의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음주량,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해당한다.

〈표 3-20〉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결과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측정 결과	전년 대비 개선 여부	주관적 지표	측정 결과	전년 대비 변화
주거 및 교통 부문	주거	주택전세가격지수	95.9	↓	주택(주거환경) 만족도	5.7	
	교통	교통사고 발생건수	447.2	↓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5.3	
	공원 및 생활편의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10.7	↑	-	5.4	
	안전	범죄발생건수	3,420	↑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일자리· 소득· 소비 부문	고용상태	고용률	61.5	↑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5.5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0.9	↑			
		여성실업률	2.4	↓			
		비농가 실업률	-				
	비정규직 비중	33.1	↑				
	근무환경	실질임금 총액	-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5.9	
성별 임금격차		-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	5.2		
가족 및 공동체 부문	가족관계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충분성	5.0	
					가족관계 만족도	6.4	
					가족 갈등 수준	3.7	
					가족 폭력경험	2.8	
	가족형태	한부모 비율	모자	5.1	↓	-	
			부자	1.5	↓		
		노인비율	154	↓			
		소년 소녀 가장 비율	0.001	↑			
일·가족 양립	-			부정적 일가족 전이	4.4		
				부정적 가족 전이	4.0		

구분		지표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측정 결과	전년 대비 개선 여부	주관적 지표	측정 결과	전년 대비 변화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수	-	-	사회적 관계유지	6.4	
		십만명당 자살률	44.9	↓			
	공동체 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5.7	
	사회적 신뢰	-		사회적 신뢰	5.0		
교육 부문	교육기회	영유아교육 접근성	-		학업수준 만족도	5.8	
		고등교육 접근성	-				
		평생교육 접근성	-				
	교육여건	교원 1인당 학생수	14.6	↓	교우관계	6.1	
		1인당 장서 수			교사와의 관계	5.7	
	교육성과	성적	-		사교육비 및 사교육 효과성	4.7	
학습시간		-		학습내용 만족도	5.3		
문화·여가 부문	기존 지표활용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 참여율	45.8	↑	-		
		레저시설 이용 여부	62.3	↓			
		국내관광여행 여부('07)	61.2	↑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	11.8	↑			
	문화 자원 및 문화 활동	-			지역 문화자원 인지도	5.1	
					지역 자원활용 여부	4.9	
					지역자원(시설) 변화 만족도	5.1	
만족도 조사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5.2		
환경 부문	물	하천수질(보통등급 이하비율)	32.9	↑	수질만족도	5.5	
		호소수질(보통등급 이하비율)	87.0	↑			
	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율(관리제외지역 지정율)	4.7	↓	주변 청결상태	5.3	
	환경보건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률			건강위험	5.1	
건강·보건 부문	건강 상태	출생시 기대수명	81.1	↑	스트레스 수준	5.5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				
		흡연율 음주율	25.7 66.2	↓	건강상태 주관적 평가	5.9	
	의료 서비스	인구 천명당병상 수	11.6	↓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	5.4	
		의료비 본인부담률	-		의료서비스 접근성 만족도	5.2	
주민 참여 부문	참여기반에 대한 인식	-		도정 운영 만족도	4.9		
				주요정책인지도	4.6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측정 결과	전년 대비 개선 여부	주관적 지표	측정 결과	전년 대비 변화
	참여	투표율	국회의원	52.4	↑	도정참여 영향 인식	4.7	
			지방선거	58.0	↑			
			대통령	72.9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청렴도	7.36	↓	도정 신뢰인식	4.8		
정보공개율		97.2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6.0		
	정서경험	-			긍정적 정서 감정 정도	6.2		
					부정적 정서 감정 정도	4.7		
	심리적 변영	-				심리적 웰빙의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정도	6.5	
성격 측정	-				외향성 (결과분석시 통제변수로 활용)	6.0		

### 3. 충남 도민의 행복감 결정요인

#### 1) 분석 방법

많은 선행연구가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혹은 주관적 웰빙에 대한 결정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의 연구인 Boarini *et al.*(2012)은 OECD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한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영역 간 중요성의 차이 혹은 소득 대비 여타 요인들의 상대적 크기를 제시한다. 이와 유사하게, 충남 도민의 행복감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종속변수를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과 같은 주관적 가치를 정의하여 이항 혹은 순서형 로짓 모형(binary or ordered logit model)이나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통해 분석한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에서의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처한 여러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개인의 특성에 따른 행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

$$Y_j = \alpha + C_j\beta + \sum_h \zeta_h \text{area}_{jh} + \epsilon_j$$

여기서, 종속변수  $Y_j$ 는 개인  $j$ 의 행복감이고  $C_j$ 는 해당 개인의 특성, 즉, 연령, 성별, 결혼여부, 학력 등을 나타내며  $\text{area}_{jh}$ 는 해당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내 시군  $h$ 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epsilon_j$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충남 도민의 행복감 결정에 있어서의 영역 간 차이를 밝히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

$$Y_j = \alpha + C_j\beta + \sum_k \gamma_k \text{sector}_{jk} + \sum_h \zeta_h \text{area}_{jh} + \epsilon_j$$

여기서,  $\text{sector}_{jk}$ 는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개별 영역별 해당 개인의 만족도 혹은 객관적 세부지표들 가운데 대표 지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행복에 있어서의 영역 간 차이와 경제적 요인 대비 비경제적 요인의 상대적 크기 등을 분석한다.

## 2) 분석 자료 및 표본

### (1) 분석 자료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여러 세부지표들 가운데 충남 도민의 행복감에 결정에 어느 지표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도민 개인의 행복감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더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2012년 충남사회조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혹은 행복한 감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과 부채유무, 소득에 대한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직업, 직장에 대한 만족도, 학력, 충남도정, 가족관계 만족도, 거주지의 환경에 대한 평가, 교통 및 안전에 대한 의견, 건강 상태, 여가활동, 문화시설 만족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 표본

분석 자료에 포함된 응답자수는 충남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8,565명에 해당한다.

## 3) 분석 결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충남 전체, 도내 시 지역, 그리고 도내 군 지역을 구분하여 이뤄진다. 종속변수인 행복감은 서은국·구제선(2011)에 의한 단축형 행복척도에 의해 정의된다.<sup>3)</sup>

먼저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개인의 특성 가운데 혼인상태와 종교의 유무에 따라 행복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미혼에 비해 기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은 반면 이혼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다.

영역별 행복감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무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일자리 자체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sup>4)</sup>

---

3) 종속변수가 -30에서 60까지의 값을 가져,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한 이항 혹은 순서형 로짓 모형 또는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단순히 최소자승추정법을 이용한다.

〈표 3-21〉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남 전체		시 지역	군 지역
	(1)	(2)		
<b>개인 특성</b>				
남성	0.1907 (1.33)	0.0682 (0.41)	0.0061 (0.03)	0.1527 (0.62)
연령	0.0576 (1.14)	0.0770 <sup>+</sup> (1.84)	0.0325 (0.62)	0.1969* (3.30)
연령 상승	-0.0007 (1.57)	-0.0007 (1.71)	-0.0003 (0.50)	-0.0016* (3.40)
기혼	2.5134** (5.31)	2.0760** (5.83)	2.3937** (5.98)	1.1163 <sup>+</sup> (2.23)
사별	-0.4675 (0.93)	-0.1131 (0.25)	-0.1663 (0.26)	-0.6105 (0.92)
이혼	-5.1858** (6.68)	-2.9732** (4.39)	-3.1983** (4.03)	-2.3602 (1.47)
가구원수	-0.0833 (0.63)	-0.0223 (0.18)	-0.0631 (0.39)	0.1082 (0.67)
종교 있음	1.7111** (7.78)	1.2260** (6.51)	1.1206** (4.12)	1.4493** (7.96)
<b>일자리/소득/소비</b> (무직)		-1.6255** (6.07)	-1.6785** (4.17)	-1.5264* (3.48)
<b>건강/보건</b> (질병)		-1.2646** (5.22)	-1.4481** (4.95)	-0.9338 <sup>+</sup> (2.31)
<b>환경</b> (대기오염 인식)		0.5685** (7.18)	0.5915** (8.32)	0.5160* (2.72)
<b>가족/공동체</b> (가족관계 만족)		2.7078** (21.33)	2.7559** (21.67)	2.5971** (9.15)
<b>문화/여가</b> (문화시설 만족)		0.2452** (3.75)	0.2497* (3.27)	0.2467 (1.85)
<b>교육</b> (교육환경 만족)		0.3318** (4.70)	0.3921** (5.67)	0.2271 (1.51)
<b>주거/교통</b> (대중교통 만족)		0.2465** (3.06)	0.2184 <sup>+</sup> (2.18)	0.2952 <sup>+</sup> (1.96)
상수항	22.1843** (19.37)	-5.1712* (2.79)	-4.6958 <sup>+</sup> (2.30)	-6.8736 (1.76)
고정효과(시군)		15	8	7
Adj. R <sup>2</sup>	0.0396	0.2254	0.2319	0.1997
관측수	28,565	25,137	16,509	8,628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이 해당 시군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함. \*\*, \*, 그리고 <sup>+</sup>는 각각 1%, 5%, 그리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4) 직업의 유무에 대한 구분에서 학생, 주부, 군인 등은 제외되었다.

건강/보건 영역에서 주요 세부지표 가운데 하나는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질병의 유무를 설명변수로 모형에 포함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질병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sup>5)</sup>

환경 영역에 대한 대표 세부지표로서 거주지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즉, 거주지 대기의 질(quality)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0(매우 나쁨)~10(매우 좋음)점을 부여-을 분석모형에 포함한다. 결과는 거주지 대기의 질이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공동체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즉, 가족 구성원들 간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0(매우 불만족)~10(매우 만족)점으로 표시-를 대표 세부지표로서 회귀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해당 개인의 행복감이 높아짐을 보여준다.<sup>6)</sup>

문화/여가 영역을 대표하는 세부지표로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0(매우 불만족)점에서 10(매우 만족)점까지 11점 척도 변수-를 모형에 포함한다.<sup>7)</sup>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해당 응답자의 행복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학군 및 학원 등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0(매우 불만족)점에서 10(매우 만족)점까지 11점 척도 변수-가 교육 영역에서의 대표 세부지표로 행복감을 결정하는 분석모형에 포함된다. 분석의 결과는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

5) 질병이나 장애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질병이나 장애가 선천적인지 아니면 후천적인지에 따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특히, 후천적인 경우에 행복감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해당 질병이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는 이뤄지지 못한다.

6) 충남사회조사(2012)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으로 다양하게 묻고 있으나 응답자가 미혼이거나 기혼이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를 다수 포함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를 설명변수로 설정한다.

7) 월평균 여가활동 횟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자료에 포함되지만, 여가활동에 대한 질적 차이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 주관적 지표인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문화/여가 영역에서의 대표 세부지표로 모형에 포함한다.

주거/교통 영역에서는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 내 대중교통- 시내버스, 좌석버스, 시외버스 등-서비스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대표적인 세부지표로 회귀 분석에 포함한다. 이 만족도 변수 역시 0(매우 불만족)점에서 10(매우 만족)점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대중교통의 만족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충남을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우, 분석의 결과는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일부 차이를 볼 수 있다. 개인의 특성 가운데 연령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가 군 지역에서는 나타나는 반면, 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행복감은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행복감의 감소가 군 지역 거주자에 비해서 시 지역 거주자에게 보다 크게 나타나며,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군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자리/소득/소비 영역에서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개인의 특성과 함께 이 영역과 관련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급근로와 전일제를 나타내는 각각의 더미변수를 개인의 특성과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급근로자가 무급근로자나 무직자에 비해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유급근로자 가운데 전일제인 경우가 시간제에 비해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sup>8)</sup>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비해 상용직 종사자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임시 혹은 일용직 종사자의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규모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가구소득이 클수록 행복감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월평균 가구소득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복감의 증가정도가 다소 작아지고 통계적 유의성도 상당히 낮아짐을 볼 수 있다.<sup>9)</sup>

---

8) 유급근로에 따른 행복감의 상대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에서 학생, 주부, 군인 등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9) 이와 같은 결과는 Easterlin 역설을 부분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22〉 인구특성별 행복감에 대한 영향

	(1)	(2)	(3)	(4)
무직	-2.5691** (7.34)			
유급근로		1.1671* (2.52)		
전일제		1.9070** (5.36)		
<b>종사상 지위</b>				
상용직			0.8857* (2.42)	
임시/일용직			-2.3257** (5.94)	
고용원이 있는 자영 업자			0.2613 (0.55)	
무급가족종사자			-0.8142 (1.10)	
<b>월평균 가구소득</b>				
1백만원 미만				-2.2211** (4.80)
1~2백만원				-0.9874+ (1.98)
2~3백만원				-0.2460 (0.58)
4~5백만원				2.0745** (3.75)
5~6백만원				2.1538** (3.33)
6~7백만원				2.9468* (2.84)
7백만원 이상				2.0501 (1.70)
상수항	22.5175** (19.89)	20.0652** (11.41)	22.2269** (18.44)	23.6863** (18.86)
Adj. R <sup>2</sup>	0.0430	0.0535	0.0479	0.0441
관측수	28,565	19,657	16,017	28,565

주 : 개인의 특성과 시군에 대한 고정효과가 통제됨.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이 해당 시군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함.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제4장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를 위한 과제

### 1. 조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 1) 주거 및 교통 분야

충남은 그동안 주거교통영역에서 주택이나 SOC 공급 같은 물리적인 여건은 좋아졌는데, 인구 저성장, 고령화,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개발 위주의 정책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정책(주거복지 및 생활인프라 공급, 안전도시 조성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제 지역정책은 도민 개개인이 삶의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어촌 등 공간의 질(Quality of Space)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거교통영역의 정책방향을 도시재생 측면과 도시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 (1) 도시재생 측면

저출산·고령화시대에는 독인가구와 고령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복지·의료·문화시설의 접근성이 양호한 기성시가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다수의 지역이 전반적인 경제수준이 정체되면서 중심시가지가 쇠퇴하고 있고, 일부 시·군은 신시가지와 신도시 위주의 개발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재생은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도시재생의 성공여부는 지역의 공동 사회문제(안전, 복지, 경제 등)를 공동체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충청남도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전략

은 주민주도의 도시형 마을만들기를 통해 더불어 사는 도시공동체를 회복하게 하고, 나아가 인간도시(Human City)<sup>10)</sup>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사업으로 해비타트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한 충청남도형 행복주거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복주거사업은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재화(지역펀드, 지역재료, 교육연구 등)와 사회적 자산을 이용해 저소득층의 자립적인 주거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커뮤니티 운동과 좀 더 긴밀히 연계하기 위해 근린 단위의 공원이나 옥상정원 등에 공동의 도시정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커뮤니티 의식을 향상시키고, 주요 작물에 대해서 공동 경작 및 텃밭 제공을 통해 지역의 안전 먹거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소규모 시민정원(Community Garden)으로 피-패치 프로그램(P-Patch Program)을 추진하면서 녹색 공간을 넓혀 건강한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있다. 매년 6천명 이상의 정원사가 70여 곳의 부지에서 10톤 이상의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하여 지역의 푸드뱅크(Food Bank)에 공급하고 있다.

## (2) 도시서비스 측면

현대도시는 사회적 약자<sup>11)</sup>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는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도시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할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교통 분야의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그동안 교통약자를 위한 시책<sup>12)</sup>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나, 도민들이 희망하는 생활인프라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충청남도는 산간, 벽·오지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도입을 모의실험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의 교통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

10) 사람의 가치, 사람다움이 되살아나고 중심이 되는 도시

11) 사회적 약자는 도시환경과 관련해서 정의시,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을 의미한다.

12) 안전한 보행환경(22개소) 조성 및 위험도로(86개소)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년 462명에서 '12년 387명으로 감소하였다.

법(CE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인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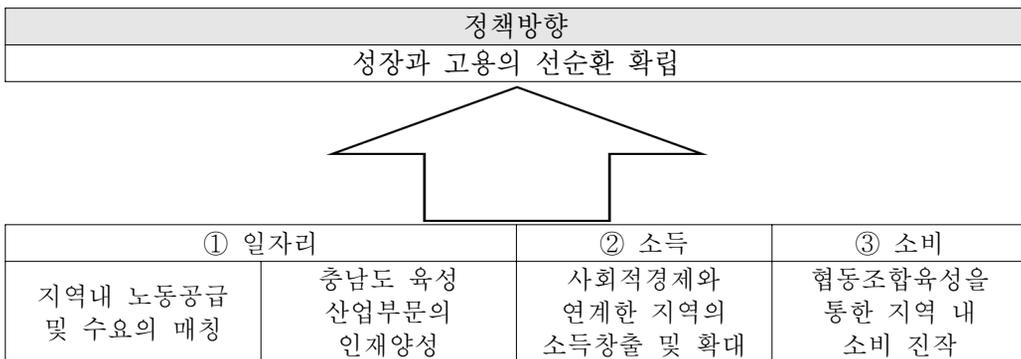
## 2) 일자리/소득/소비 분야

앞선 분석을 요약하면 충남의 고용률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일자리/소득/소비의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충남 일자리/소득/소비 부문의 정책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표 3-23〉 일자리/소득/소비부문 분석결과 요약

고용률	충남의 고용률은 타 시도 평균보다 높음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충남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편
여성 실업률	여성 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음
일자리/소득/소비만족도	보통

〈표 3-24〉 일자리/소득/소비의 정책방향



그동안 충남은 외자유치, 수도권의 기업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충남의 2000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GRDP 성장률은 10.2%로 16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의 경제는 외형적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왔고, 수치적으로만 살펴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경제우위 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충남은 이와 같은 고성장과 더불어 전국평균과 대비하여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은 비교적 건전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충남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전국 대비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충남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도 상존한다. 충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워 지역 젊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비중이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만큼 육아와 가사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이탈한 젊은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도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기혼여성의 경우 낮은 학력과 노동시장 조기 이탈로 인해, 노동시장 재진입시 무급가족종사자나 제조업체의 단순조립조작 등 저숙련 일자리로 복귀하거나 혹은 노동시장 복귀를 포기한 채 지속적인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르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 북부권(천안·아산·서산·당진)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나머지 시군의 경우 농림어업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더 높다. 이는 전체적인 충남지역의 시군간 소득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충남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불일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대기업의 경우 초과 공급인 노동시장이지만, 아직까지 충남의 제조업기반 중소기업들은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고용지원서비스가 현재 충남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구인·구직간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현황과 진단을 통해 일자리/소득/소비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충남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자리분야의 경우 첫째, 지역 내 노동의 공급 및 수요의 매칭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역고용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 고학력 청년층이 지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젊은 여성들의 결혼·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고령화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요컨대 고학력·청년층·고숙련 노동력을 유인하는 전략과 여성·고령자·저숙련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향후 노동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한 충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정책이 필요하다. 충남지역의 인력수요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내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훈련 정책들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이 원활하게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의 개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력채용 노력과 및 고용조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소득분야의 경우 충남은 천안·아산·서산·당진의 북부산업 벨트에 산업 및 노동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타 시군과의 지역 내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쇠퇴지역의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소득과 복지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의 모범사례를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분야의 경우 지역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소비시장은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지역의 특산물 발굴 등은 시도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지자체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혜성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를 도입하고 로컬푸드 운동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협동조합법도 이와 같은 지역민의 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내생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가 지역산업을 부양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다양한 유형별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지역내 생산과 견실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서로간의 호혜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이 지역 내에 정착된다면 지역상권은 지금보다는 건강하고 견실한 시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교육 분야

시장과 민주주의 정체가 전통과 문화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사회에 자리잡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주관적으로도 또한 객관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돕기 위해 교육은 어떻게 가능해야 하며, 또한 교육 자체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교육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개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생활과 공동체의 생활에서 자율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은 개인들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다. 또한, 개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물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교육이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점과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책임감을 갖는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학교의 교육과 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교육은 삶의 전 영역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아야 할 객관적 지표도 매우 다양하게 제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지표들에 대하여 대체 가능한 지표의 개발과 함께 다양한 통계치의 측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전 조사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사용가능한 수치를 적용시키는 것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올바른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정성적 평가에서는 사교육비에 대한 만족도 부분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영역의 정책방향을 앞서의 조사결과와 원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편화된 초·중등 교육의 질적인 측면으로 공교육의 핵심적인 이 분야에서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과 입학 스트레스, 장시간의 학습시간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행복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교육영역의 주관적 지표에서 계열 또는 전공, 교육여건, 학생-교사관계의 불만이 많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초중등의 교육기회의 접근보다 질적 차원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사교육의 공교육에 영향과 사교육비 부담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효과가 없거나 단기적으로만 나타날 때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도와 도 교육청의 협력과 더불어 학교의 교사와 지역의 주민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민주적 방향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영·유아 교육의 접근성은 전통가족의 해체, 일인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일과 가사의 공존의 부재, 높은 교육비 등의 이유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영·유아 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대적 투자의 부족, 현 정부 하에서의 무상보육 실시 등으로 이에 대한 접근기회를 늘리라는 요구로 보인다. 정책적으로는 양질의 공공보육기관을 확충하는데 전국을 통일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질의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과 공공투자(와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보육이 영리성을 강조하는 원리로 진행해

왔던 관행과 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기회의 기준으로 선택된 평생교육의 접근성은 주민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평생교육센터 등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처럼, 초중등 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서 무료나 싼값에 양질의 교육 내용을 신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진로개발과 진로교육을 생애 단계별 맞춤형으로 실시하여 계열과 전공에 대한 불만족을 개선해야 한다. 계열과 전공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교육투자가 생산적 인적자본으로 이어지지 않고 학습에서의 행복감의 지속성을 낮추고 삶의 문제를 더 얽히게 만드는 것으로 된다. 이는 도 차원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4) 가족 및 공동체 분야

가족은 개인이 출생 후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1차적인 집단이다. 모든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근본적 원천이다. 구체적으로 구성원 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너무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가족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 방식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영역을 살펴볼 때 최근 변화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행복과 관련해서 가족 및 공동체 부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다양한 측면 중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가족과 공동체의 때 시기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어떤 측면을 중요시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며 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축적가능해야 한다.

충남의 소년소녀가장 가구비율은 전국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며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고 노인가구비율 역시도 전국 평균 수준과 비슷하며 다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률의 경우 전국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성지표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 간 폭력이나 갈등 형성 등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사회 소속감이나 사회의 신뢰수준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

가족 및 공동체의 변화상을 추적하기 위해 기존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자료를 꾸준히 구축해야 한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경제활동연구 등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전체적 개괄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매년 생성해내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의 경우 보도자료를 위해 전국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분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풍부한 자료의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료들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도정 방향과 맞는 문항을 개발하여 꾸준히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되도록 바꾸지 말아서 오래 시간 동안의 추이를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지표를 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왜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자살을 하는지 왜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지 등을 고민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체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지만 행복 유지와 증진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때문에 충남도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여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들이 야근과 주말근무를 줄이는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스스로가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고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등 공무원들의 가족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면 많은 기업이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구성원들과 가족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높은 만족도 수준은 곧 높은 삶의 질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 만족도 응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통이라는 응답도 어느 정도는 불만이 섞여 있는 경우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조사의 결과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아주 핑크빛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다만 충남도의 정책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몇몇 가족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한부모가족과 독거노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다. 이런 예가 보여주듯 정부는 가족생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발굴내해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한 결과이다. 안타깝게도 충남도민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대체로 낮다. 이렇게 낮은 신뢰도에 충남도의 책임은 대체로 크다. 사회기관별 신뢰도 결과를 보면 정부나 국회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언제나 낮은 편이다. 때문에 충남도는 이 낮은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고 공공정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 5) 문화 및 여가 분야

문화와 여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소득이나 건강, 주거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삶의 활력과 휴식, 재충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여가는 필수적이거나 의무적인 활동이 아닌 그 외의 자유시간 활동과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Trewin, 2001). 문화와 여가 생활은 직업적인 문화활동이 아닌 경우 개인에게는 비경제적 활동이지만,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며, 여가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시켜줌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통계개발원, 2011). 문화·여가는 전통적으로 기본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노동에 대해 대비되는 것으로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개인이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생활은 자기 결정적이고 내적 동기화된 여가활동을 통해 생활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여가활동의 재미적 요소를 통해 몰입하여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즐겁고 유쾌한 상태로 유지하여 얻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통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만족스런 수준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여가적 경험과 나눔의 가치실현을 통한 행복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일-삶의 조화(Work-Life Balance)’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윤소영, 2009).

문화 및 여가 분야는 타 지역에 비하여 충남도의 현실이 매우 부족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생 있어서 전국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항상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레저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해외여행 경험 등도 상승하고는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하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성적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에 있어서도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및 만족도 등 모든 부분에 있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충남의 문화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충남도의 문화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도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키고 여가 활동의 참여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는 무엇보다 인간의 지적 창의력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회이므로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예술 토양을 가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기량을 닦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시 및 공연 공간을 조성·지원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 문화·여가 분야의 행복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여가 향유 기회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소외계층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의 확대는 충남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계층간 불균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책방향과도 상통한다. 정부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정서적·문화적 욕구충족,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사회적 유대감의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큰 방향을 선정한 바 있다. 충남은 타지역보다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많다. 아울러 충남은 대표적인 농업도로서 농어촌지역이 많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공단 또한 곳곳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충남은 소외계층의 문화적 접근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외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지역의 예술가나 지자체 및 자원봉사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충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충남이 도민의 문화·여가의 질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과 전략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목표는 계층 간 문화격차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여가를 위한 기반조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충남의 문화·여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자체적인 문화·여가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혜자의 수와 관련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복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문화복지 매개인력을 문화복지 현장에 배치하여 문화복지 업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예술인, 체육인, 문화예술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재능기부 및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예술인과 체육인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술가 등의 재능기부, 정부 및 민간의 후원, 자원봉사 활동 등이 연계되어 선순환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 6) 환경 분야

환경문제는 위해 물질 배출로 인한 공기 및 물의 오염, 산업화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등이며, 간접적인 요소인 기후 변화, 탄소 및 수질 사이클의 변환, 생물다양성 손실 등은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건강성을 위협하는 자연 재해 등으로 영향을 미친다. 생활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지만 그 위험에 대한 대책수립 및 대응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인간은 환경적인 쾌적함과 불쾌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람들의 생활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인간은 생활과정과 활동공간의 편리성을 위한 여러 형태의 유형으로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개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공기질 저하, 수질 오염, 소음·진동 발생, 연안 환경 훼손, 생태면적 감소 등)는 인정하지 않고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 도민의 생활 및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간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던 지난 세대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중심적이던 가치관이 인간도 자연환경의 일부분이라는 환경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즉, 균형적인 환경관리가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나아가서는 인류 존재를 유지하는 기본적 요소이므로 각종 개발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관리에 관한 도민의 의식은 국가와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에 환경보호를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가치를 기대하는 것이다. 즉, 도민은 국가와 충청남도에 대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지속적 보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기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국지적 또는 일부지역 전체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환경오염은 단기간에 치유되기 어려우며, 지금도 다양한 환경 침해요인이 산재하고 있어 현재의 환

경상태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다. 또한, 부분적이지만 지역발전의 요인들이 점차 환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도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행복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환경 지표들은 충청남도 도민의 바라고 체감하고 있는 행복이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와 연계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여건에 맞추어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고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도민이 느끼는 행복과 연계된 환경정책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높아지는 도민들의 행복에 대한 욕구와 환경에 대한 요구를 도정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전략 및 중장기 계획들과도 환경분야 지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각 부서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적 지표들은 충남도의 목표, 또는 부서 간의 지표들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지표체계는 각 환경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의 성과지표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서 실제 업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개발 과정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하천 및 호소수질, 환경보전, 폐기물에 대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하천 상류의 수질상태는 비교적 깨끗해지고 있지만 하천의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수질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호소의 경우 담수량 대비 유역면적이 넓어 체류시간이 긴 호소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안지역의 담수호를 중심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욕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공공수역의 수질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물관리에서 수량과 수질, 유역을 함께 고려하는 유역중심적인 통합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하여 우선적으로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농촌지역에서는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도시지역은 생활하수관리와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관류 하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충청남도는 상·하수도 보급률이 매우 낮으므로 보급률이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건전한 물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폐공을 찾아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보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성질환(천식 및 아토피 피부염유병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 지하수, 공기 등 환경의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환경성질환에 대한 지표들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대기, 물환경 및 화학물질 거동변화에 따른 질환의 발생에 대한 관심과 예방 등을 포함하는 환경보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해물질에 대한 인체, 생태계 노출수준 및 환경성질환 발생현황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성질환의 조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주요 환경성질환을 추적 및 감시하고 환경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환경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환경보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의 집중과 각종 건설사업 및 도시지역 조성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생활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비율이 44.8%로 가장 높고, 매립비율 34.3%, 소각처리비율은 20.9%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 재활용비율 목표치인 60%를 상회하도록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소각비율을 증가시키고, 매립비율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과학적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확립과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하여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도심 집단주거지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규모 소각장 건설 등 하드웨어에 투자하기 보다는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재사용과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 7) 건강 및 보건 부문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인하여 예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들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충남은 도시와 농

촌이 공존하여 건강/보건 관련 정책의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선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의료환경이나 접근성은 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지역에서의 고령층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충남 도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은 전국 평균에 비해 좋지 못한 편으로 기대여명이 낮고,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은 편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치료율, 만성질환 관리 교육 이수율, 합병증 검사율 등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 관리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사인별 사망률에서 충남은 위암, 폐암, 뇌혈관질환, 당뇨 등 사망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생활습관개선 및 질환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행복의 필수요건인 복지보전에 대한 충청남도의 요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복지와 보전을 위한 재정·인력의 확충이 중요할 것이다. 도민과 복지보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의 증대는 높은 서비스 수준을 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질의 인력’ 이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므로 공공 및 민간 영역 인력의 질적 향상만이 이러한 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보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은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의 낭비와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전달체계 개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향후 복지후진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충남도의 입장에서 건강/보건에 대한 지표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도민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 정책 대상의 선별적 혹은 순차적 시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건강·보건 분야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농촌지역 고령층을 위한 접근성 개선이나 다문화가정의 임신 및 출산 지원 등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검사의 시군 통계를 산출하여 각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이러한 지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과 각 보건소의 주민참여형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남의 행복지표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공중보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보건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보건복지 연계, 주민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농

어촌 보건 의료 현안 문제에 농특세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쓰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중보건 의사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큰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관련한 보건의료 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늘려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충남도에 있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강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공공의료기능강화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도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 및 산부인과 등 보건의료 취약지 문제를 충남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제3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투자 분야를 새롭게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러한 영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전염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도민 대상 공중 위생이나 예방법에 대한 교육의 강화도 필요하다.

## 8) 주민참여 부문

주민참여가 충남의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영역으로 선정된 것은 기존 GDP가 사회와 개인의 삶의 조건과 수준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삶의 질에 대한 각종 논의에서 경제적, 물질적, 환경적 요소들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물질적, 환경적 요소는 개인 및 집단에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주관적 감정에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가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 또는 집단이 느끼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국회의원 투표율의 경우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난 선거 보다는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하여 다소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지난 대선 투표율을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렴도의 경우 전년대비 약 -1.03p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책고객평가에 있어 전국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고객들이 느끼는 신뢰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 만족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뢰확보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에 대한 측정지수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주민참여지수 개발의 기본방향은 결국 주민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고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즉, 주민참여지수에 따른 성공적인 주민참여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주민들의 참여의지와 이를 촉진하거나 뒷받침하는 참여시스템 및 참여문화이다. 사실 주민참여제도가 갖 추어진다고 해서 주민참여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과 함께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제도는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주민참여제도를 제도화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참여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가운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거래비용과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성공적인 주민참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지방의원 등)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신념과 리더십,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 동기부여와 함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의사결정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을 법제화한 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의 운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 공개의 내실화,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 변화, 역기능의 통제, 시간과 가용자원 제약조건의 극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및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 행복지표 조사와 정책연계를 위한 과제

### 1) 정책적 연계를 위한 조건

주로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hedonic adaptation 가설에 의하면, 행복은 개인의 타고난 기질에 영향을 받아 외적인 변화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가설이나 주장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면, 도민의 행복지표와 정책의 연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게 된다. 하지만, Lucas(2007), Federick and Loewenstein(1999) 등은 외적인 환경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감이 변화함을 보여주며, 이는 측정된 행복지표에 기초하여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행복측정의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사회지표운동이 확산된 이래로 꾸준히 전개되었다. 삶의 질이나 행복을 측정하는 사회지표의 활용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행복’에서의 문제 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까지를 그 목표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화, 정책 프로그램의 평가,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활용된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고서(social report)나 웹사이트를 통해 지표결과를 공개하는 수준으로, 작성된 행복지표의 결과물은 정책적 활용보다는 국민인식전환 역할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쟁점들이 무엇이고, 그 문제의 수준은 어떠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려줌으로써,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견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주주의의 인프라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서 볼 때, 행복측정의 성과는 정책적 활용이나 연계보다는 일반적인 계몽(enlightenment)에서 두드러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oll, 2004).

그럼 왜 사회지표 운동 초기에 정책적 활용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형성이나 평가, 우선순위 결정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1980년대 목격되는 사회지표 운동의 급격한 약화와도 관련되어 있다. 1960~70년대 진행된 사회지표에 대해 이론적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기술적이며(descriptive), 정태적, 비역사적이며 또한 사회동향을 추적하는 개별적 총합 측정에 기초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Esping-Anderson, 2000). 행복이나 삶의 질을 그 핵심개념으로 추진되었던 사회지표의 급속한 쇠락을 연구했던

Cobb는, 사회지표의 측정 결과가 왜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없었고, 그 결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복이나 웰빙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대한 인과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 2) 정보공개를 통한 인식전환 기능의 강화

### (1) 행복지표를 통한 변화의 모니터링

행복지표의 도민에 대한 인식전환 기능도 중요하다. 주민생활의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경제지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다양한 측면의 도민생활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들의 생활변화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금융 및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제지표와 국민생활 간의 격차가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정 노력은 결과적으로 사회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안자와 국민들의 관심과 논의를 유발한다. 그리고, 도민의 행복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능력은 구체적인 정책 대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박형수·전병목, 2012). 독일, 영국, 대만, 네덜란드, 우리와 같은 국가에서 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사회지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능을 중시한 결과이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의 사례도 국민 행복 또는 웰빙 관련 상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둔 예들이다.

사실, 행복이나 웰빙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인 경제지표를 넘어서 광범위한 사회현상에 대한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에서 출발하였다(Land, Michalos & Sirgy, 2012). 현대사회의 많은 조직화된, 사회변화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행위자들 특히 정부, 조직 및 활동가뿐만 아니라 학자나 시장개척과 생산혁신에 관심이 있는 마케팅 연구자들은 그들이 관심이 있는 지표의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두 번째 원리로 행복이나 웰빙의 측정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보고(social reporting)를 통한 대중의 계몽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사회동향을 기술하고, 왜 일련의 지표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가를 설명하고, 이러한 지식이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일련의 지표들 간의 중요한 관계를 조망하는 사회보고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설명에서 웰빙나 행복을 측정하는 사회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 (2) 고객지향적 제시방법의 구상과 확산

이러한 행복지표의 계몽적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결과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와 함께 보고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행물들을 살펴보면, 주요 지표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더불어 전체 지표에 대한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간행물에 제시된 각각의 통계표의 내용이나 그 내용이 갖는 함의를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시되는 자료의 경우에도 대부분 통계표만 보여주고 있어 통계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작성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선 결과물이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보통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표보다는 그림 등의 그래픽을 활용하여 그 내용이 흥미롭고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표 측정 결과의 추이(trends)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표 선정 절차 및 근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각 지표의 측정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각 지표의 정의를 보다 쉽게 제시하며, 지표 측정 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지표의 변화 추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설명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행복지표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개별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많은 각각의 지표들에 대한 측정 결과는 전체 보고서를 통하여 제시될 수밖에 없지만, 일반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종합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측정 결과를 보다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약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Florida의 Jacksonville에서 작성한 삶의 질에 관한 지역 사회지표 보고 양식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Jacksonville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각각의 지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종합보고서 외에 요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그림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쪽에 걸쳐 전체 지표들의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지표들에 대해 발간 연도의 측정 결과 수치와 더불어

화살표의 방향을 통하여 전년도 측정치 대비 증가 혹은 감소 여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화살표의 방향과 더불어 화살표의 색을 통해 전년도 대비 증가 혹은 감소 여부가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더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더 나빠진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약 보고서 중간에 제시된 두 쪽의 표를 통해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지표에 대해 현재의 수준, 변화 추이, 변화의 방향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4-1〉 Jacksonville의 '한 눈에 보는 삶의 질 보고서'



출처 : <http://www.jci.org/quality-of-life-report>

결과물의 확산 방안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표 통계 수치를 제공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단순히 통계표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그 통계표에 나타난 수치들이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관한 설명은 거의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표 측정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보도자료나 보고서 등을 통해 결과를 공표하는 것보다 훨씬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단순히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경우처럼 해당 지표에 대한 도표와 더불어 변화 추이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행복지표 체계 내에 포함된 모든 지표에 대하여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최소한 지표 영역별로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각 지표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현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과거와 비교하여 변화 추이가 어떠한지,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단순 통계표보다는 그림이나 그래프를 사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광역 지자체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에 대해서는 비교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 서울특별시의 희망서울 생활지표 홈페이지(예시)



출처 : <http://socialindex.seoul.go.kr/>

### (3) 언론의 활용 제고

행복지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언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지표 작성 초기부터 언론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행복지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주요 결과를 단순히 보도자료로 통해 알리기보다는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특정 지면을 지표 결과 보도에 할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지표 측정 결과의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신문에 직접 기고하거나 지역의 라디오나 TV 토크쇼 등의 출연을 통하여 행복지표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3) 정책적 활용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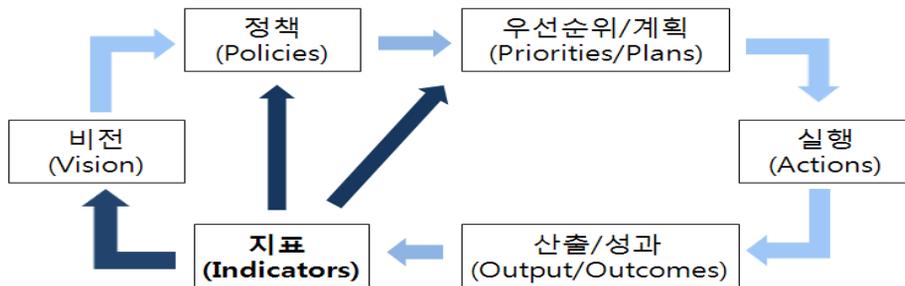
### (1) 정책적 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지역사회지표 결과 도출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그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문제이다. 행복지표는 지역 주민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values)와 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실행(actions)간의 차이에 대한 대차대조표이다(Phillips, 2003). 따라서 바람직한 행복지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동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행복지표 결과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은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결정자에게 지표 결과를 보고하고 공무원의 정책 입안 및 수행 결과의 평가 과정에 지표 측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목표의 설정, 이를 위한 예산 책정, 목표 달성 여부 확인 등의 과정에서 행복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복지표 보고서를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지표를 통해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행복지표 조사를 통해 충청남도는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자원투입이 필요한 영역을 판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 효

과적인 사회변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표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공유된 관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행복지표는 충청남도의 정책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림 4-3〉 행복지표의 정책과의 연계



## (2) 행복수준과의 인과관계 규명(분석)

행복지표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Cobb가 지적한대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노력과 성과가 전제되어야만 정책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주민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행복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최선의 과실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첫째, 행복에 변화를 야기하는 결정요인, 즉 행복의 개선 혹은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양한 생활영역에 걸쳐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통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영역은 일반적으로 성격과 같은 유전적 요인 외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면에 물질적 조건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적응으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관적 웰빙을 개선하는 정책을 강구할 경우, 개인의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가능한 방안, 예컨대 지역동호회 지원과 같은 정책방안이 실제 주민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에 대한 인과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행복의 관련 영역이 방대한 만큼 실로 방대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영역간의 관련성에 대한 규명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이러한 결정요인들과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적 연구성과 축적의 필요성에 비추어 현재의 행복지표 연구를 정책에 활용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이며 향후 더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행복지표에 대한 측정조차 늦은 편이며, 이에 따른 관련 연구결과 축적도 많지 않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서,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의 OECD 파리 포럼 연설(2011)에서도 “사회 진보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개발이나 정책 입안에 있어 그 기초가 되었다.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그것이 우리생활에 가져오는 개선의 정도를 신뢰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최선의 과실을 가져올 수가 있다” 고 역설하였다. 이도 구체적 정책에 의한 웰빙 개선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측정의 신뢰성과 인과적 설명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유엔 행복보고서(Helliwell etc, 2012)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행복에 대한 과학은 아직 유아기 단계로 정책적 함의는 아직은 미미하며 잠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행복학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 핵심적 과학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았다. 행복에 대한 증진된 이해는 세 단계를 거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첫째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측정, 둘째 개인, 지역사회, 전체 인구에서 행복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설명, 셋째 이러한 이해를 행복의 증진과 불행의 감소를 위한 정책에 활용하는 단계이다. 사실 현 수준에서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더 많은 정보와 검증이 요구된다. 분명한 사실은 현 시점에서 우선 행복을 측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행복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한 측정이 존재해야, 이것에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대한 인과적 연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3) 거시적(추상적) 행복지표와 총남도의 세부성과지표 연계

행복지표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행복 측정 지표의 추상화 수준과 관련이 있다. 행복 측정을 위해 선정된 지표가 추상화 수준이 매우 높고 거시적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고용률과 같은 지표는 추상화 수준이 매우 높아 개별 기관의 노력으로 단위 정책으로 쉽게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공공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지표를 선정할 경우, 행복 지표와 정책들과의 연계성은 더욱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충남도의 정책연계를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지표선정이 요구된다. 이는 지역사회지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서, 행복지표가 결과에 근거한 책무성(the results-based 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지표는 충청남도의 정책 성과평가를 반영하는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앞의 예와 연관지어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 목표가 지역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충청남도의 노력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의 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통해 해당 정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충청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고용률이 원하는 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충청남도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성과는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청남도의 정책 수행의 결과, 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상대적으로 충청남도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표선정 기준으로 정책민감성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해외의 다양한 지역사회지표의 역사에서도 경험했던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상화 수준이 높고 일반적인 지표(예, 고용률)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통제가능한 구체화된 지표(지방정부 창출 일자리 수)를 동시에 활용하는 노력이 진행되기도 한다. 만약 충청남도의 노력으로 달성가능하지 않는 지표만으로 선정된 경우,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만 지속될 수 있다.

#### 4) 행복지표의 조사 및 운영방식의 개선

##### (1) 충청남도 사회지표조사를 활용한 행복지표의 조사

행복지표의 조사는 가능한 많은 도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행복지표에 대한 조사는 정량지표의 경우 기존 통계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성지표의 경우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정성지표의 경우 사회지표조사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의 활용에 있어 대상자가 달라 조사결과의 활용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정성지표의 경우 중복조사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성지표에 대한 조사의 경우 도 이외의 기관이 별도로 추진할 경우 15개 시군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을 만큼의 대상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약 1,000부를 조사하였으나 충남지역의 다양한 특

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별 인구격차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조사결과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충남사회지표조사에 이를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충남사회지표조사는 충남이 처해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으로 나타내어 삶의 질 및 사회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사회지표에 적용된 지표통계는 기존 통계 자료를 재분류·가공하여 작성되고 추가 필요한 통계는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충남사회조사는 충남도민의 주관적 인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구방문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일과 일자리, 교육, 보건의료, 주거와 교통, 환경,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지역사회 참여 등 행복지표를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조사는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식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시점 기준 충남지역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약 15,000가구를 조사하고 있어 그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지표를 사회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사대상의 규모면에서나 비용 측면과 중복성에 있어서 필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 (2) 조사분석 전담부서(기관)의 운용

행복지표의 측정은 이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질 때 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행복지표의 측정결과를 정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냄과 동시에 행복감의 변화를 비롯하여 지표들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해야만 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충남도에서 각종 통계 및 사회지표 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정책기획관실의 통계담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3-4명의 인력으로는 분석의 전문성을 비롯하여 인력운영상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행복지표 뿐만 아니라 현재 충남도에서 새로이 개발되어진 지속가능지표 등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당장 통계담당부서에 새로운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분석능력을 요할 뿐 아니라 업무량을 감안하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발전연구원 및 정책자문위원들과 각 지표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임시적으로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지속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설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 부득이한 경우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업무를 추진토록 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지표의 지속적 개선과 관리

현재 개발된 행복지표를 조사하여 정리하였으나 조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통계자료가 적절치 못하거나 통계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계와 충남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계가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영역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표의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표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도민들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체감도는 영향요인들이 변함으로써 변할 수 있으며 충남도의 추진 정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과 변화가 필요한 지표들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정책개발을 위한 세부 영역 및 대상에 대한 연구

현재 개발되어 조사된 행복지표는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영역에 있어서도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지표는 충남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유용한 측면이 있는 반면 세부적인 정책을 개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충남의 전체적인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행복지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측정됨과 동시에 세부 영역과 대상을 축소 또는 한정하여 세부적인 조사연구가 병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즉, 보다 세부적인 대상과 영역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정의 정책개발이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행복연구의 대상을 사회적 약자 또는 농어민 등 그 대상을 한정지어 보다 세부적인 전략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3. 정책적 활용 사례

#### 1) 부탄

부탄의 GNH는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 도구로 활용된다. 정책 및 재정사업의 효과가 GNH의 가치에 부합하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GNH를 증진시키는 정책은 채택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기각된다. 이러한 GNH 핵심 결정요인은 시범조사 및 GNH 설문조사에 근거한다.

부탄은 PST(Policy and Project Screening Tool)를 통해 정책을 선별함으로써, 신규 정책 및 계획에 GNH를 반영한다. PST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프로젝트는 ① 모든 부처와 영역을 위한 것(예를 들면, 좋은 거버넌스) ② 개별 부처를 위한 것(예를 들면, 교육, 건강) ③ 개별 영역을 위한 것(예를 들면, 청년, 고용)으로 구분된다.

정책 및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질문을 구성하고 총점을 산출하여 도입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는 1(부정적), 2(불확실), 3(중립적), 4(긍정적)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CBS(Center for Bhutan Studies)는 GNH의 모든 9개 영역에 걸친 심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모든 정책과 프로젝트가 이러한 문항들을 통과해야만 한다. 심사대상인 어떠한 정책(안) A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평균 중립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계산은 각 질문에서 받은 점수(1~4)를 합산하여 이루어지며, 중립적 점수 이상이면 정책평가를 통과하게 된다. 평가에서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점수는 질문수와 중립(3점)을 곱해서 계산된다. 중립적 점수 미만일 경우 해당 정책 및 재정사업은 재검토되거나 기각된다.

심사지표는 형평성, 경제적 안전, 물질적 웰빙, 생산활동참여, 의사결정기회, 부패, 사법 효율성, 사법 접근성, 권리, 양성평등, 정보, 배움, 건강,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황폐화, 지구환경보호, 동물보호, 사회적 지지, 가족, 자연, 오락, 문화, 가치, 정신적 수양, 스트레스 등을 포함한다. 실제로 형평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심사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지표	1(부정적)	2(불확실)	3(중립적)	4(긍정적)
형평성	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소득 집단에 유리	소득 집단 간 효과에 대한 차이의 불명확	소득 집단 간 평가가능한 효과가 없을 것	고소득 집단에 비해 저소득 집단에 보다 유리
스트레스	인구집단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킴	인구집단에서 스트레스 영향수준을 알수 없음	인구집단에서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인지가능한 영향이 없음	인구집단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춤

이러한 심사는 정책이나 프로젝트 관련 정부부처와 GNHC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며, 심사위원의 수는 각각 10~12명으로 공무원, NGO, 언론 등 다양한 사회계층과 분야로 구성된다. PST는 현재까지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며, 심사지표의 수와 내용 또한 시대흐름에 맞춰 변경 및 수정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 A가 스트레스, 문화, 체육의 3가지 영향에 대해 평가받을 경우, 정책 A는 GNH 영향평가에서 스트레스, 문화, 체육의 3가지 평가질문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립적 점수는  $3 \times 3 = 9$ 이며, 정책 A는 최소 9점 이상을 획득해야 평가를 통과하게 된다.

〈표 4-1〉 부탄 정책심사도구의 22개 선정지표

Equity	Public Health
Economic Security	Water and Air Pollution
Material Well Being	Land Degradation
Engagement in Productive Activities	Bio-diversity Health
Decision Making Opportunity	Social Support
Anti Corruption	Family
Legal Recourse	Leisure
Rights	Culture
Gender	Values
Information	Spiritual Pursuits
Skills and Learning	Stress

## 2) 일본

### (1) 내각부 산하 웰빙측정위원회

일본은 World Value Survey에서 행복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본의 높은 자살률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20대와 30대 가운데 세 명중 한 명은 과거에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행복감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일본 내각부는 산하에 웰빙측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 사람들의 웰빙측정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하였다.

### (2) 지방정부의 노력

#### ① 후쿠오카현

일본의 지방정부 가운데 하나인 후쿠오카현은 행복도에 대한 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사회가 성숙하고, 가치관이 다양화하는 오늘, 행복에는 경제적인 풍족함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풍족함 또한 불가결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후쿠오카현에 태어나서 좋다, 후쿠오카현에서 생활해서 좋다 라고 실감할 수 있는 「현민행복도 일본제일」을 목표하기 위해서, 현재 후쿠오카현이 진행하고 있는 행복실감의 향상책, 이후의 현민의식조사가 취해야 할 방향등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이나 폭넓은 견지로부터 검토를 행하기 위해, 「행복도에 관한 연구회」를 설립했습니다.”*

출처 : <http://www.pref.fukuoka.lg.jp/f03/kouhuku.html>

후쿠오카현은 「현민행복도 일본제일」의 기본이 현민생활의 ‘안정’, ‘안전’, ‘안심’ 이렇게 3가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10개의 실현목표와 구체적인 시책을 종합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10개의 실현목표는 i) 활력과 성장력이 가득 찬 경제와 고용의 창출, ii) 재해나 범죄, 사고가 없고,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iii) 고령자나 장애자가 안심하

고 발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iv) 여성이 활발히 일하고 활약하는 것, v)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것, vi) 누구나 건강히 살 수 있는 것, vii) 마음의 따뜻함과 유대감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가 있는 것, viii) 아이·약자가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치는 것, ix) 환경과 조화롭게, 쾌적하게 사는 것, x) 풍부한 문화를 즐기며 국제교류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실천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책의 전개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단계에서는 현민 대상 의식조사를 통해 현민의 행복도, 시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시책목표에 대해 이의 달성도를 확인하거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의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후쿠오카현을 만드는 것이다.

현민 의식조사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는 모니터 요원 2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항목은 ‘행복을 느끼는 일’, ‘행복실감도’, ‘행복실감을 판단할 때 중시하는 기준’, ‘행복실감을 판단할 때 중시하는 사항’, ‘5년전과 현재의 행복실감 비교’, ‘현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책’, ‘후쿠오카현에 태어나서, 생활해서 좋은지’, ‘현이 행복실감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생각하는 것에 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었다.

<후쿠오카현의 현민대상 행복실감 조사결과>

- 후쿠오카에 태어나서, 생활해서 좋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회답의 비율이 80%를 상회했다.
- 현정 모니터의 행복실감 평균점은 10점 만점에서 6.38점이었다.
- 행복실감을 판단할 때 중시하는 기준은 '미래에 대한 기대·불안', '자신의 이상과 비교', '과거의 자신과 비교', '타인과 비교' 의 순서였다.
- 행복실감을 판단할 때 중시하는 사항은 '가족관계', '건강상태', '소득·수입', '좋은 생활환경', '일이나 취미등 삶의 보람' 의 순서였다.
- 5년전과 비교해서 행복하다는 긍정적인 회답의 비율이 50%를 넘고 부정적인 회답의 비율은 20%정도였다.
- 현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시책에 관해서는 '고용대책 추진', '수입안정·소득향상', '방법, 교통안전대책의 강화', '고령자지원 충실',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 '아이양육 지원 충실' 의 순서였다.
- 행복실감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유의견은 총 94건 있었으며 긍정적인 의견이 64건(68.1%), 개선의견·의문·그외 의견이 26건(27.7%), 부정적인 의견이 4건(4.3%)이었다.

## ② 미에현

2012년에 책정한 「미에현민력 비전」에 대해 현에서는 「현민력으로 추구하는 『행복실감 일본제일』의 미에현」을 기본이념으로 현민의 「행복실감」을 파악하여 현의 행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현민 1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미에현민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에서는, 2012년 5월에 공표한 「제1회 미에현민 의식조사」의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현민의 행복실감의 향상과 정책의 방향에 관해 논의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략기획부 내에 「미에현민의식조사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 <미에현민 의식조사 결과>

1. 성별로 행복감을 분석하였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감이 높다. 여성의 삶의 실감을 보면 남성보다 '상담 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2. 연령별로는 30대의 행복도가 높고 그 외의 연령대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생활의 실감에 대해서 30대는 현재 평균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20대와 같은 양상으로 '삶의 보람'이 있으며 '상담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40대는 '정신적 여유'가 없고 50대와 같은 양상으로 '자유로운 시간'도 없으며 '여가는 충실'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60대 이상은 '자유로운 시간'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며 '이웃과의 사귄이나 지역에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며 또한 70대 이상에서는 '여가는 충실'하다고 느끼고 있다.
3. 직업별로 행복감을 보면 전업주부, 정규직원이 높고 무직과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이 낮게 나타난다.. . .

## ③ 쿠마모토현

쿠마모토현은 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쿠마모토의 꿈 4개년 전략」을 수립·추진하였다. 이는 현정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정책전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쿠마모토의 꿈은 현민으로 하여금 '태어나서 좋고, 거주해서 좋고,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고 싶은' 쿠마모토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4개 분야에 걸친 12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전략에 대해 목표와 이의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4개 분야는 경제상승 쿠마모토(경제), 장수안심 쿠마모토(주거), 품격있는 쿠마모토(자랑), 사람이 빛나는 쿠마모토(사람)을 구성되어 있다. 경제상승에 있어서의 목표는 농림어업자의 안정된 소득의 확보, 주도산업(leading industry)의 집적의 가속과 중소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 관광숙박객수

의 증가를 포함한다. 장수안심에 있어서의 목표는 건강하고 다양한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현민의 증가,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의 정비, 다양한 삶의 방면에서의 안전의 확보를 포함한다. 품격있는 쿠마모토에 있어서는 자랑할 수 있는 지역의 매력을 창출, 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환경입현 쿠마모토의 구현, 큐슈신칸센 전선개업효과의 최대화를 목표로 한다. 사람이 빛나는 쿠마모토의 목표는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증가, 아이들의 확실한 학력과 건강한 신체를 기르는 것, 일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 사람을 응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태국 GHI(Green and Happiness Index)

#### (1) 도입 배경 및 개발

태국 정부는 제8차 개발계획('97~'01)부터 ‘성장 중심적’ 이던 접근법을 ‘사람 중심의 개발’로 변경하였다. 그간 성장 중심적 개발의 한계와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부탄의 GNH(Gross National Happiness) 등과 같은 웰빙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개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GHI 개발에 착수하였다. 총리실 산하 경제사회개발 위원회(NESDB)<sup>13)</sup>에서는 GDP 등 생산 지표가 국가개발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의 성과와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 GHI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차 개발계획('06~'11)을 “Green and Happy Society”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GHI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2006년 8월부터 GHI 지수 개발에 착수하여, NESDB는 국내 및 해외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런 회의 과정을 거쳐 GHI를 통해 추구하는 바를 개념화하고, 지표 정의 및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계, 관계기관, 공기업,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GHI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행복에 관한 지역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

13)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 (2) 지표구성 및 지수산출

이런 절차를 통해 구성된 지표에 대한 '01 ~ '06년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평가를 시행하였다. GHI 지수는 6개 분야 18개 하위 분야 30여개의 핵심지표와 44개 보충지표로 구성되었다. 6개 분야는 건강, 따뜻하고 다정한 가족, 지역사회 역량 강화, 좋은 거버넌스를 갖춘 민주적인 사회, 생활환경 및 생태계, 경제발전 및 공정성이다. 30여개 핵심지표는 모두 수량적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보충지표는 핵심지표로 측정된 평가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지표이다.

〈표 4-2〉 GHI 지수의 구성

분야	하위분야	핵심지표	보충지표
1. 건강	<b>신체건강</b>		
	- 신체건강	질병 없는 인구 비율	- 2.5kg 이상 신생아 비율 - 거동이 불편한 인구 비율 - 체육활동 인구 비율 - 영양과다 인구 비율
	- 장수	연도별 평균수명	
	<b>정신건강</b>		
	- 정신건강	정신질환 환자 비율	
	- 도덕성	인구 1천명당 범죄	종교활동 인구 비율
	<b>지식</b>		
- 교육의 성과	문맹률	15세 이상 학교교육 평균 기간(年)	
- 교육의 질	교과목 시험점수	교육기관 등록 인구 비율	
- 정보습득력		- 글을 읽을 수 있는 인구 - 인터넷 사용 가능 인구	
2. 경제발전 및 공정성	<b>정직한 생활</b>		
	- 고용	실업률	- 저소득 노동자 비율 - 월/연간 근로시간
	- 충분한 소득	소득이 지출의 10%를 초과하는 가구 수 비율	- 가구 저축률 - 평균 가계부채
	- 고용안정성 및 직업안전성	사회보장 대상 근로자 비율	- 산재로 인한 장애근로자 비율 - 화학적 손상 피해 근로자 비율
	<b>소득분배</b>	- 빈곤율 - 지니계수	- 소득분배 격차
<b>경제발전</b>	- 경제성장 - 중요소생산성 - 인플레이션율 - 경상수지/GDP	-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	
3. 따뜻하고 다정한 가족	<b>가족의 역할</b>	- 방치 노인 비율(10만명당) - 버려진 아동 비율(10만명당)	- 가정폭력 비율 - 가정 및 아동 사건 비율 - 모든 가족이 함께 사는 비율
	<b>건강한 가족</b>	이혼율	혼인신고율
4. 지역사회 역량강화	<b>지역 자립성</b>		
	- 경제적 측면	농업협동 비율	- 지역사회 내 노동력 - 50% 이상 지역사회 자본이용률
	- 문제해결 능력		- 그룹활동 수 - 개발계획을 가진 지역사회 비율
	<b>지역사회 통합</b>	사회보장제도 구비 지역사회 비율	사회복지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마을 비율
<b>지역사회 참여</b>	- 지역사회 그룹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 비율 - 평생교육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마을 비율	공공활동 참여 가구 비율	

〈표 4-2〉의 계속

분야	하위분야	핵심지표	보충지표
5. 생활 환경 및 생태계	<b>삶의 질</b>		
	- 주거	주택소유 가구 비율	
	- 인프라 및 서비스	수도시설을 갖춘 가구비율	전기가 들어오는 가구 비율
	<b>생활/재산의 보호</b>	- 범죄발생 비율 - 마약밀매 발생 비율	사고/화재로 인한 사망 또는 재산손실
	<b>환경</b>	- 일정한 수질을 갖춘 강, 호수 등 수역 - 규정에 맞게 처리된 쓰레기량	- DO, BOD, TCB 등 기준치 이하 주요 강 비율 - 10 $\mu$ m 이하 먼지 - 온실가스 배출 - 고형폐기물 생산 - 고형폐기물 잔류 - 유해폐기물 생산 - 농촌부문 화학제품의 사용량
<b>생태계</b>	- 상품성 있는 수상생물 포획량(시간당) - 산림면적	- 멸종위기종의 수 - 총국토 대비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율	
6. 좋은 거버넌스를 갖춘 민주적인 사회	<b>시민의식</b>	- 교통법규 위반 통계 - 선거참여 비율	- 환경/천연자원보전 단체 수 - 지역사회의 단체수(10만명당) - 지역사회 그룹/지방 행정기관에 속한 구성원을 가진 가구 수
	<b>좋은 거버넌스</b>	- 투명성 지수 - 행정법원/반부패위원회 심사 사건수(10만명당)	- 기업 지배구조 - 독립기관에 접수된 신고 수
	<b>사회적 결속</b>	인권침해 사건/신고비율(10만명당)	최남단 3개 지역의 사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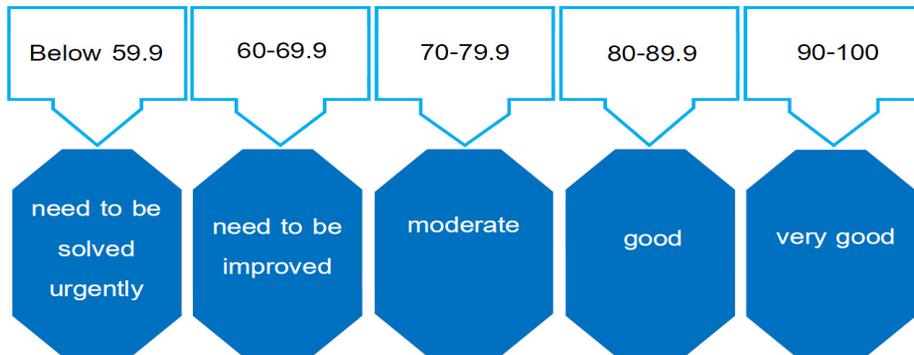
자료: Development of Happiness Index for Thai Society, NESDB, 2007

GHI는 각 분야를 종합한 하나의 종합지수로 산출되며, 각 분야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이러한 동일 가중치 부여는 행복한 사회 달성을 위한 각 분야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 (3) GHI의 활용

GHI 지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책 평가 및 시사점에 차등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60점 미만은 ‘긴급하게 해결 필요’, 60~70점 미만은 ‘개선 필요’, 70~80점 미만은 보통, 80~90 미만은 ‘양호’, 90~100점은 ‘매우 양호’로 판정된다.

〈그림 4-4〉 GHI 평가점수에 따른 정책적 의미



자료: Sufficiency Economy & Green and Happy Society, 22nd JASID National Conference, Paranee Watana(NESDB), 2011.11.27

이런 GHI 지수로 평가한 10차 개발계획은 세부 정책적 시사점보다는 태국의 경제·사회 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GHI 지수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종합지수의 분석과 각 분야별 및 하위분야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런 GHI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의 향후 정책대응 방향성을 마련하게 된다.

부탄의 GNH에 비해 정책연계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하지만, 이런 GHI 산출 결과를 정책과 연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그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5〉 제10차 개발계획 기간(2007~2011)의 GHI 산출 결과



자료: Sufficiency Economy & Green and Happy Society, 22nd JASID National Conference, Paranee Watana(NESDB), 2011.11.27

〈표 4-3〉 GHI 산출 결과를 통한 정책권고

1	태국사회의 조화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거버넌스 조성</li> <li>▪ 법집행 촉진</li> </ul>
2	부패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메커니즘 강화</li> </ul>
3	교육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강화</li> <li>▪ 교육의 질 제고</li> <li>▪ 평생교육 증진</li> </ul>
4	마약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집행 강화</li> <li>▪ 개발 파트너와의 협력 증진</li> <li>▪ 마약 문제 예방을 위한 가족관계 강화</li> </ul>
5	공해규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개선</li> <li>▪ 효율적 관리</li> <li>▪ 인식 증진</li> </ul>

자료: Sufficiency Economy & Green and Happy Society, 22nd JASID National Conference, Paranee Watana(NESDB), 2011.11.27

#### 4) 잭슨빌 사례

해외에서 작성되고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행복이나 웰빙지표는 주정부, 도시, 카운티 수준으로 다양하며 그 사례는 수백 가지가 넘는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관심사는 ‘삶의 질’ 측정 사례이다. 플로리다 주 잭슨빌 지표는 가장 대표적이고, 또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초기에 구축한 지역사회지표로 이후 다른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의 전범이 되었다. 잭슨빌 사례는 잭슨빌 지역사회위원회(Jacksonville Community Council, Inc.; JCCI)의 설립으로부터 출발한다. 1974년 플로리다 주 잭슨빌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행정 절차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975년에 JCCI를 설립하였다. JCCI는 광범위한 비영리, 비당파적 시민조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통한 잭슨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JCCI는 United Way of Northeast Florida와 잭슨빌 시, 기업체, 개인 회원들의 후원 및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JCCI 설립 10년 후인 1985년에 삶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in Jacksonville: Indicator for Progress)가 시작되었고, 이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사회지표 프로젝트이다. 이후 미국 및 세계 여러 지역사회지

표 프로젝트의 안내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삶의 질 측정결과에 대한 ‘삶의 질 발전 보고서(Quality of Life Progress Report)’는 연간 보고서로 3가지 종류로 제공되고 있다. 먼저 요약문서(summary document)로 삶의 질 각 영역의 비전과 연관되어 지역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둘째, 참고문서(Reference Document)로 각 지표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보고서이다. 셋째로 공동체 조망(Community Snapshot)으로 JCCI 사이트에서 각 이용자가 원하는 지표에 대한 정보를 연도, 세부 지역 등의 조건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웹기반 뷰어 방식의 자료이다.

이들 지표 자료의 활용과 관련해서, JCCI는 지표들이 자료화되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3가지 기본 방향을 정해두었다. 먼저 출판과 배포, 둘째 봉사과 언론홍보, 셋째 시민 기반의 지역사회 관련 연구이다.

먼저 자료의 활용방안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잭슨빌 시장과 상공회의소장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에서 매년 지표 보고서의 내용이 발표된다. 기자회견은 지역 언론과 JCCI의 친밀감을 주었고, 지표 프로젝트에서 참고 자료를 활용하도록 촉진시킨다.

언론에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데, 지표의 추세, 목표치 등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매해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이 지역사회지표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현재의 관심 쟁점들에 대한 참고 자료와 도표 정보를 얻기 위해 JCCI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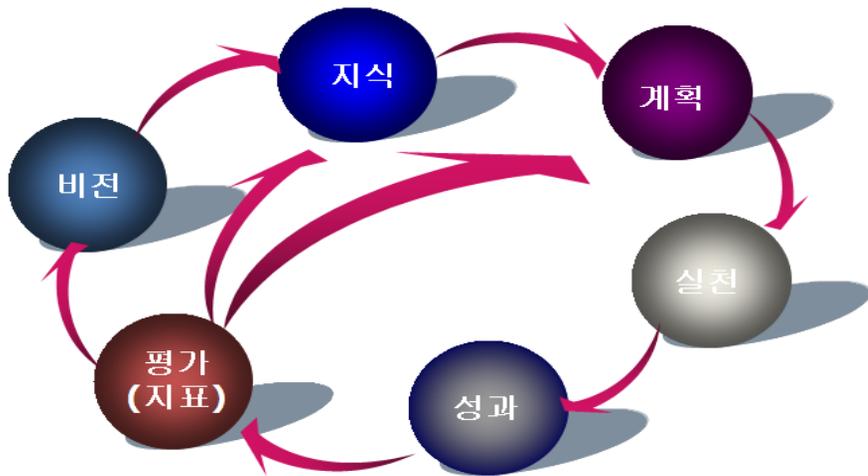
또한 여러 단체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회 이상의 발표회를 열고 있다. 매해 상공회의소장이 6개 지역 의회와 정부 위원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잭슨빌의 삶의 질 지표들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는 지표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도화되는 것을 돕는다.

지역사회 연구와 실행 프로젝트팀에 의한 실행을 위한 연구과정은 잭슨빌 지표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모델이다. JCCI는 지표들을 지역사회 연구의 주요 쟁점 선정의 가이드로서 이용한다. 프로젝트팀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한 연구들은 JCCI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쟁점과 연관된 모든 요인들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보고서들이 만들어졌다. 지역사회 연구 보고서들은 실행에 대한 권고들로 결론을 맺는데, 이 권고 사항들은 자원봉사자 실행 프로젝트팀에서 2년간의 교육 캠페인의 기본 자료로 이용된다.

잭슨빌의 여러 지역 단체들도 실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지표 정보를 이용한다. 지표의 추세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나 테마이슈를 정하거나, 이미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서 지표 정보를 이용하기도 한다. 잭슨빌 시, 잭슨빌 상공회의소, United Way of Northeast Florida 등의 지표 프로젝트의 협력자들은 연간 지표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반응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지표와 지역사회 연구 과정에 참여하거나, 공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림 4-6〉 Jacksonville 지표체계의 지역사회 변화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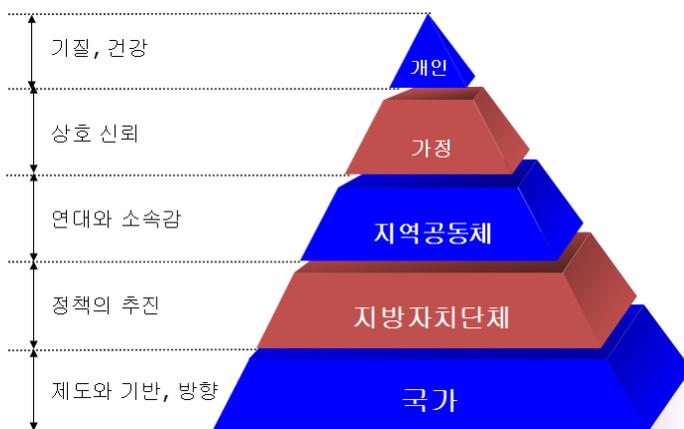


#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 1. 정책제언

개인의 행복증진은 해당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 지자체, 국가 등 모든 위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개별 위계에서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은 실제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모든 정책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의 가용자원이 한정적임을 감안하면, 이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5-1〉 개인의 행복과 위계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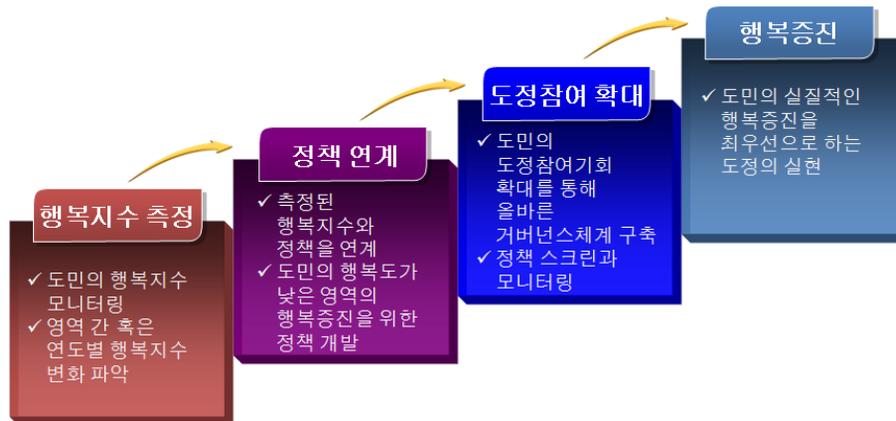
행복은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의 기질이나 성향에 의해 상당 부분이 결정되지만, 객관적 여건 역시 중요하다. 삶을 위한 기본적 필요인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충족을 위한 세부 정책들에 대해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복은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축소를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국민행복정책에 기반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시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우선, 도민의 행복지표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영역 간 혹은 시계열적으로 도민 행복지표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민 행복지표의 측정을 통해 영역 간 혹은 세부지표들 간 여건의 변화를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역이나 세부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개발에 도의 예산과 인력을 집중시킴으로써 행복지표의 정책연계를 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책의 개발과정에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발된 시책이 도민으로부터의 지지를 얻고 도민의 행복증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나 기존 정책의 지속이 도민의 행복증진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시책의 개발이나 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도민의견수렴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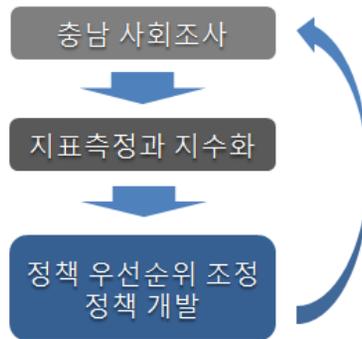
충남도에서는 현재 지속가능지표를 개발하였고 사회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표와 조사에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 의도한 목적에 따라 상이한 지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조사가 실제 조사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표들을 포함하여 조사되어야 하며 조사 후 그 목적에 맞는 해당사항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표와 조사의 효율적 측정과 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충남도의 정책추진



도민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시책을 개발하거나 부탄에서와 같이 개별 정책에 대해 도민의 행복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을 심사하는 것이 충남도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정책별 예산범위를 정함에 있어 측정된 행복지표의 반영이 필요하다.

〈그림 5-3〉 충남도민 행복지표의 측정과 정책연계



## 2. 결론

기대와는 달리, 행복지표의 정책적 활용은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해결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유엔보고서의 지적대로, 행복에 대한 연구가 정책적 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추가적인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행복측정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행복 측정은 행복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행복의 관련 요인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적 연구 노력에 비해 국내의 측정노력이 취약하고 결과의 축적이 미흡한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측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수준, 그리고 국제적 비교 측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행복측정이 웰빙지표로서 GDP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위에서 측정을 통해 우리 삶의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행복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충남 행복측정은 이런 연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구적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행복 측정이 정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유엔보고서와 Cobb의 연구에서 공히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런 노력은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지역 사회차원이나 국내에서 행복이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이해해야만 가용한 정책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는 정책적 활용보다는 실태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인과관계 탐색의 토대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본 연구만으로 부족하고, 국내의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수준의 지식이 확보되어야만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행복의 증진과 불행의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가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행복 측정이 정책적 활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 측정 연구가 일회성 연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승희 외. 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충남발전연구원.  
국토연구원, 2012,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 취약성 분석 및 도시방재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제388호.
- 김경석, 2011, “3S 도로 조성방안”,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만들기 전략과제 워크숍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 김명소·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승권·장영식·조승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 3인,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신영외 1인, 2006, 한국 청소년 행복·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윤태, 2010.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문화경제연구」 13(1):23-45
- 김지경·송은경. 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로 사는 부모 가구와 자녀가 구  
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pp.37-63.
- 박대식·마상진·신은정. 2005.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환, 2009. “근대사회의 행복논리”. 〈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 박혜경·고미선·정승화·국미애. 2004. 인천시민의 가족실태 및 가족가치관 조사. 인천발전연구원.
- 서은국·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25(1),  
pp96-114.
- 서은국, 2012. “행복의 심리학적 이해”. 〈충남발전연구원 행복연구회 내부 발표자료〉
- 서은국·구재선·이동귀·정태연·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성지미·안주엽. 2006.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1): 39-74.
- 심수진·이희길. 2009. 사회조사 항목 개발. 통계청.
- 양현미·심광현·박건희, 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  
광연구원

- 오용준·윤갑식, 201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지 제13권 제4호.
- 요하네스발라허지음(박정미옮김), 2011. 「경제학이 깔고 앉은 행복」. 대림북스
- 이민아. 2010. "결혼상태에 따른 노인의 우울도와 성차." 한국사회학 44(4): 32-62.
- 이성규, 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윤석. 2010. "취업한 기혼남녀의 일과 가족 전이: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의 통합적 접근." 한국인구학 33(2): 1-31.
- 이윤석. 2011.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 연구." 한국인구학 34(3): 1-30.
- 이희길, 2012. "사회발전 및 웰빙 측정". <충남발전연구원 행복연구회 내부 발표자료>
- 이희길·심수진, 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 임영진·고영건·신희천·조용래, 2010. "한국인의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 전상인, 2009. "행복의 공간 사회학 시론". <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 조지프 스티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 지음(박형준 옮김), 2011. 「GDP는 틀렸다」. 동녘
- 최항섭, 2009. "미디어와 행복". <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 통계개발원,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 2011.
- 통계청. 2006. 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8. 2008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10. 2010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11. 전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보도자료. 통계청.
- 한국인구학회. 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구결과: 심층 분석을 위한 연구." 통계청.
- 황명진·심수진, 2008.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 Alan B. Krueger, David A. Schkade (2008). The reliability of subjective well-being measu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 1833-1845
- Berger-Schmitt R., and Noll, H., 2000, Conceptual Framework and Structure of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EU Reporting Working Paper No. 9, Centre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 Mannheim.
- Boarini, R., M. Comola, C., Smith, R. Manchin, and F. Keulenaer (2012), "What Makes for a Better Life?: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OECD Countries - Evidence from the

- Gallup World Poll,"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 Clark, A. E. and A. J. Oswald(1994), "Subjective well-being and unemployment," *Economic Journal*, 104, pp. 648-659
- Coontz, S. (1997). *The Way We Really Are*. Basic Books.
- Cummins, R.A. (2000),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 interactive mod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42(1), 55-72.
- Delors, J., Mufti, I., Amagi, I., Carneiro, R., Chung, F., Geremek, B., et al.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Paris, France: UNESCO Publishing.
- Diener, E, RE Lucas, U Schimmack and JF Helliwell (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d and Suh, Eunkook M.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89-216.
- Diener, Ed and Suh, Eunkook M.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89-216.
- Esping-Anderson(2000), "Social Indicator and Welfare Mointoring :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Programm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Development.
- EU, 2006,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비교연구 프로젝트.
- Jane Jacobs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Second Edition, Random House, New York.
- Keizer, M. and L.J.G. van der Maesen(2003), "Social Quality and the Conditional Factor of Socio-Economic Security," working paper
- Lucas, R., A. Clark, Y. Georgellis, and E. Diener(2004), "Unemployment Alters the Set Point for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15(1), pp. 8-13
- Noll, Heinz-Hervert(2004),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Background, Achievements and Current Trends", Genov, Nicolai Ed. *Advances in Sociological Knowledge Over Half a Century*. Wiesbaden: VS Verlag fur Sozialwissenschaft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76 *Measuring Social Wellbeing: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Pari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82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86 Living Conditions in OECD Countries: A Compendium of Social Indicators, Paris.
- Schneider, M. (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 297-305.
- Sen, Amartya. (1985). Well-being, Agency and Freedom: the Dewey Lectures., Journal of Philosophy, 82(4), 169.221.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Trewin, D.(2001). Measuring Wellbeing,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U. 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1996, 『Creating Defensible Space by Oscar Newman』, US.
- Winkelmann, L. and R. Winkelmann(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 pp. 1-15

No.

## 충남도민의 영역별 만족도 및 행복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도민이 느끼고 있는 행복영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주거/교통, 일자리/소득/소비, 가족/공동체, 교육, 문화/여가, 환경, 건강/보건, 주민참여, 주관적 웰빙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 각 영역에 대하여 도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및 행복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본 설문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행복영역의 특성을 규명하고 충청남도 도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히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 내용에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해당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고 승 희

### ■ 응답자 기입사항

귀하의 거주지역은?	① 천안시	② 공주시	③ 보령시	④ 아산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당진시	⑨ 금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귀하의 연령은?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 1. 주거 및 교통

번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현재 거주하시는 주거환경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교통시설이 편리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께서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2. 일자리 소득·소비

번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현재의 직장(일자리)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께서는 직장(일자리)내 인간관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께서는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3. 가족 및 공동체

번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하루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께서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의 가정에 가족 간 갈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귀하의 가정에 가족 간 폭력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귀하께서는 직장업무가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귀하께서는 가족관계가 직장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귀하께서는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귀하께서는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귀하의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4. 교육

번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의 전공 또는 학업수준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자녀)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귀하는 사교육비 및 사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귀하(자녀)의 학습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귀하(자녀)의 학습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5. 문화 및 여가

번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는 지역의 문화자원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는 지역자원(시설)의 변화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귀하께서 누리는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6. 환경

번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현재의 수질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는 주변의 청결상태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의 주변에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7. 건강 및 보건

번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의 스트레스 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귀하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8. 주민참여

번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의 현재 총남 도정의 운영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는 총남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는 도정참여를 통해 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귀하의 총남도정에 대한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9. 주관적 웰빙

번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의 전반적인 삶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는 긍정적 정서(즐거움, 행복감 등)를 자주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는 부정적 정서(슬픔, 불안감 등)를 자주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귀하는 향후 현재 보다 더 행복해 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귀하의 성격은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고승희 · 홍성호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내부연구진 · 이상진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신혜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진 · 이희길 박사(통계개발원)

전략연구 2013-01-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 방안

글쓴이 · 고승희 외 6인 /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3년 12월 31일 / 발행 · 2013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231(행정복지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39

ISBN · 978-89-6124-217-2 03350

<http://www.cdi.re.kr>

© 2013,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